연구보고서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노조 조직기반 변화에 관한 연구

2010. 12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노조 조직기반 변화에 관한 연구

2010. 12

□ 연구진
인수범(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발 간 사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노조 조직기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노동조합운동이 이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변화는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조직기반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조의 정책방향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노조 조직기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구조변화는 그동안 서비스산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현상들이 논의된 바 있다. 이런 변화들이 노조의 조직기반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경제위기가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언제나 노조는 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노동시장 변화는 최근 있었던 경제위기에 의해 추동된 면이 크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노동시장 문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높다.

노동조합은 최근 들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조직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노조의 조직기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이 이런 고용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노조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노조 조직기반 변화에 대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10년 1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9

제2장. 기존 논의 검토 ····· 11

1. 노동시장 구조변화 ····· 11

2. 노조 조직기반 변화 ····· 14

제3장. 노동시장 구조변화 ····· 16

1. 노동시장 동향 ····· 16

2. 산업 및 직업별 노동시장 변화 ····· 26

3. 고용형태별 노동시장 변화 ····· 36

4. 소결 ····· 45

제4장. 노조 조직기반 변화 ····· 47

1. 노조 조직상황 ····· 47

2. 산업별, 직업별 노조 조직 ····· 55

3. 소결 ····· 68

제5장. 결론 ····· 69

참고문헌 ····· 71

표 차례

<표 3-1> 시기별 고용증가율과 GDP증가율 ····· 17
<표 3-2> 주요 고용동향 ····· 21
<표 3-3> 2010년 취업자 전망 ····· 22
<표 3-4> 2010년 산업별 취업자 전망 ····· 22
<표 3-5> 연령층 및 성별 취업자 ····· 23
<표 3-6> 연도별 산업별 취업자 증감추이 ····· 26
<표 3-7> 연도별 직업별 취업자 증감추이 ····· 31
<표 3-8>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 36
<표 3-9>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 41
<표 3-10>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 43
<표 4-1>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비교 ····· 49
<표 4-2> 노동조합 수 현황 ····· 49
<표 4-3> 조합원 규모별 조직현황 ····· 51
<표 4-4>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 ····· 51
<표 4-5> 조직형태별 조합원 수 비교 ····· 52
<표 4-6> 상급단체별 조직현황 ····· 52
<표 4-7> 노동조합 조직현황 ····· 53
<표 4-8> 연도별 노동조합 수와 조직률 ····· 54
<표 4-9> 노조조직형태별 조직현황 ····· 55
<표 4-10> 총연맹별 산업별 조직현황 ····· 57
<표 4-11> 주요 산별노조 ····· 61
<표 4-12> 산별노조(연맹)의 연도별 추이 ····· 62

그림 차례

[그림 3-1] 경제성장률 추이: 1997~2009년 ····· 17
[그림 3-2] 취업자 수 추이: 1997~2009년 ····· 18
[그림 3-3] 취업자 수 증감 추이: 1997~2009년 ····· 19
[그림 3-4] 실업률 추이: 1997~2009년 ····· 20
[그림 3-5] 청년층(15~29세) 고용률 추이 ····· 24
[그림 3-6] 고령층(55~79세) 고용률 추이 ····· 24
[그림 3-7] 청년층의 실업률 추이 ····· 25
[그림 3-8] 농림어업의 취업자 증감 추이 ····· 27
[그림 3-9] 제조업의 연도별 취업자 증감 추이 ····· 28
[그림 3-10] 건설업의 연도별 취업자 증감 추이 ····· 29
[그림 3-11] 서비스업의 연도별 취업자 증감 추이 ····· 30
[그림 3-12] 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 ····· 32
[그림 3-1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 33
[그림 3-14] 학력별 취업자 증감 추이 ····· 34
[그림 3-15] 비정규직 비중 추이 ····· 36
[그림 3-16] 기간제 고용 추이 ····· 37
[그림 3-17] 시간제 고용 추이 ····· 37
[그림 3-1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 ····· 38
[그림 3-19] 성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 39
[그림 3-20]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 40
[그림 3-21] 사회서비스업 비정규직 추이 ····· 42
[그림 3-22]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 44
[그림 4-1] 연도별 조합원 수 추이 ····· 47
[그림 4-2] 연도별 노조조직률 추이 ····· 48
[그림 4-3]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조직률 변화 ····· 50
[그림 4-4] 성별 노조조직률 ····· 63
[그림 4-5] 학력별 노조조직률 ····· 64
[그림 4-6] 산업별 노조조직률 ····· 65
[그림 4-7] 업종별 노조조직률 ····· 66
[그림 4-8] 직업별 노조조직률 ····· 66

제1장. 서론

한국 노동시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고용 변화를 겪은 바 있고, 노동운동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보다 고용안정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에 일어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고용문제'가 더욱 더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노동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이 다양하게 창출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청년계층의 실업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심지어는 노동부의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였다. 이제 노동정책의 핵심의제가 근로조건이나 노사관계보다는 고용안정에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상황은 해당 시기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수년에 걸친 경제침체기를 겪어 왔기 때문에, 노동시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생각되고 있다.

노동운동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존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전체적인 실업률 감소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노동운동이 고용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시기에 이루어진 노동자 정리해고 및 기업 구조조정을 경험하면서 부터이다. 이제는 노동자 고용위기 문제가 일상적으로 쟁점 상황으로 등장하고 있고, 비정규직 활용으로 상징되는 고용유연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층 및 여성의 취업난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도 현재 노동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노조조직화 측면에서 조직기반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노사정 모두는 최근 노동시장 구조변화 양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인지, 일시적 경기상황으로 인한 현상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도,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조의 조직적 기반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노동조합은 지난

10여 년간 조직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서 현재 조직률이 10%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노조 조직수준 약화의 원인은 노동조합운동이 모범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산업구조 변화 및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노조 조직기반의 약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성격상 기존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직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자계층에 대한 조직화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운동은 조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개혁활동 및 미조직조직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상황은 노동조합운동의 이념 및 활동방식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조 조직기반인 노동자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노조 조직기반의 구체적 양상은 각 산별노조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각 노조별로 조직기반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안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노조조직의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대응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노조 조직기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노동조합운동이 고용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노동시장 구조 및 노조 조직기반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 최근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들이 한국 노동시장 및 노조 조직기반에 어떤 변화를 보였다고 분석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최근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주요 변수별로 살펴볼 것이다. 주로 산업구조 변화, 업종 및 직종별 변화, 고용형태별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어 4장에서는 노조 조직기반에 대해 현재 상황 및 조직 강화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노조 조직기반이 되고 있는 산업 및 직종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노조가 조직 강화를 위해 주력해야 할 사업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은 결론 부분으로 앞 장들에서 이루어진 분석에 기초하여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노동운동이 조직력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방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2장. 기존 논의 검토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노동시장과 노조 조직기반과 연계하여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다. 노동시장 연구는 고용상황 및 실업구조를 파악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정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상황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비정규직 규모나 비정규직법의 효과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되기도 하였다.

노조 조직기반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별로 없고 노동조합 조직차원에서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관련해서 미조직노동자 및 비정규노동자 규모 및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노조 조직화 과제를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조 차원에서는 산업별로는 노조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해당 산업 내에 존재하는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1. 노동시장 구조 변화

노동시장 구조는 시기별로 여러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병희 외(2008)는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성장, 구조변화, 일자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의 초점은 1998년 외환위기의 여파가 어느 정도 정리된 2000년대에 고용문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는 단위 성장률당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줄어들어서라기보다는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데서 기인한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낮아진 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은, 외환위기로 꺾여진 국내총생산(GDP)과 취업자 수 추세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외환위기 이전의 추세로 되돌아오지 않았고, 외환위기 이전의 추세보다 그 이후의 추세가 더 둔화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성장률이 높을 때 생산성 증가율이 높고 성장률이 낮을 때 생산성 증가율로 낮은 경기순행적 움직임을 보여 고성장기일수록 고용탄력성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넷째, 1990년대 이래 우리나라 제조업에 가해진 생산성 향상 압력 때문에 저생산성 제조업이 축소되어 제조업 고용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2000년대에도 그러한 경향이 지속되었으나 그 압력은 다소 둔화되었다. 다섯째,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력 저하는 자영업 부문의 고용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특히 최근의 경기변동기에 자영업 부문은 구조조정을 겪으며 축소되고 있다(이병희 외, 2008: 11).

이런 경제구조 속에서 산업별로 고용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제조업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중에서 화학·기계·전기전자공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 기간에 광공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62만명 감소하였는데, 고직능직 일자리는 27만개가 증가하고 저직능사무직에서는 6만개, 생산직에서는 83만개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하였다.

두 번째로 서비스업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고용이 줄어든 것은 가사서비스업에 불과하다. 고용증가가 특히 두드러진 것은 사업서비스업이고,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세 번째로 청년층의 경우는 1993년, 1998년, 2003년에 고용률이 낮아졌고 2005년 이후에는 경기와는 무관하게 고용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병희 외(2008)의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관련된 고용탄력성이 둔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산업별 추이는 제조업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청년층은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문제에 대한 연구도 있다(황수경 외, 2010). 이 연구는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다루고 있다. 노동시장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로 한국사회가 1998년 외환위기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다양한 금융 및 재정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었고, 국제금리의 하락 추세에 힘입어 효과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면서 급작스런 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었다. 둘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전에 비정규직 규모 조정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상용직 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 자영업자에서 고용

위기가 전면화 되어 나타났다. 셋째, 외환위기의 학습효과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급작스런 고용조정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갖게 하였다. 노사 모두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합의와 조정에 보다 적극적이었고, 기업 수준에서의 미시적인 조정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대량실업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현재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구조 변화는 외환위기 경험의 토대 위에서 커다란 정리해고 보다는 주로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의 고용조정을 통한 변화로 정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노조의 조직기반 변화

노조 조직기반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동조합 조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김정한(2009)은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를 가지고 영역별로 나누어 특성을 정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직률, 노동조합 수 및 조합원 수, 상급단체별 조직현황, 적용법규별 조직현황, 조합원 규모별 조직현황, 종업원 규모별 조직현황, 조직형태별 조직현황을 다루고 있다.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조직률은 2008년 현재 10.5%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하였는데, 이는 조직대상 근로자 수는 증가한 반면 조합원 수는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조합 수는 4,886개소로 전년보다 213개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업별노조가 초기업노조로 전환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거나 소규모 사업장 노조의 해산처리 등에 기인한다. 조합원 수에는 공무원이 19,000명이 증가하였다. 셋째, 상급단체별 조합 수는 민주노총이 538개소, 한국노총이 2,662개소로 민주노총 조합 수가 적지만 조합원 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비해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고 대공장노조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

넷째, 조합원 규모별 조직현황을 보면 지역업종노조,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노조 수는 2,435개소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지만 조합원 수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수는 3.6%에 지나지 않지만 조합원 수 비중은 71.4%나 된다. 다섯째,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는 조직률이 45.4%로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30미만 기업의 경우는 조직률이 02%에 불과하다. 여섯째, 조직형태별로 보면 기업별노조는 92.6%이고 초기업노조(산별노조, 지역업종노조)는 6.58%로 기업별노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편 김유선(2008)은 연도별 조합원 수 추이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조직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크게 보아 연도별 조합원수 추이, 인적속성과 일자리 속성별 조합원 수 비교, 산별노조 조직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조합원 수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급속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정체되어 왔다. 이런 추이는 남녀 조합원 수 추이에도 그대로 나타나 1987-89년에 남녀 모두 조합원 수가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전체 조합원 173만명 중 여자가 45만명(25.7%)이고, 노조조직률은 남자(14.5%)가 여자(6.9%)보다 2배 이상 높다. 학력별 조직률은 대졸이상(15.2%), 전

문대졸(11.6%), 고졸(11.0%), 중졸이하(5.8%)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연령별로는 노조조직률이 30대 후반(14.0%)이 가장 높다. 셋째, 산업별 조직률은 광공업(15.9%), 유통서비스업(14.7%), 사회서비스업(11.9%), 사업서비스업(10.7%), 농림어업건설업(5.9%), 개인서비스업(3.4%) 순으로 높다. 남녀별로는 남자는 유통서비스업(21.1%)이 가장 높고, 여자는 사회서비스업(10.8%)이 가장 높다. 넷째, 고용형태별 조합원 수는 정규직(150만명)이 비정규직(24만명)보다 6배 이상 많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이 65만명(37.7%)으로 규모가 클수록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계층별로는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조직률이 낮고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률이 높다.

제3장. 노동시장 구조 변화

1. 노동시장 동향

한국 경제는 1970년대에 연평균 10.3%, 1980년대에 8.6%, 1990년대에 6.7%씩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것이 2000년대에는 연평균 4.4%대로 성장률 자체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표 3-1> 참고). 특히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던 1998년과 2009년에는 각각 -5.7%, 0.2%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낮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노동시장도 2000년대 들어 급격한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고 완만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시기별로 고용증가율을 보면 그 특성을 잘 볼 수 있다. 고용증가율은 1970년대에 3.9%이던 것이 1980년대에는 2.6%로 감소하더니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중간에 경제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동일하게 고용증가율이 1.5%로 1970년대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1980년대에 비해서는 거의 2분의 1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GDP증가율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각각 10.3%, 8.6%였던 것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각각 6.7%, 4.4%로 2-4% 정도 감소하였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증가율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과 관계에서 취업자증가율을 보는 고용탄성치를 보면 특히 2000년대에 취업자증가가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고용탄성치는 각각 0.39, 0.25였던 데 비해 2000년대에는 0.13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취업계수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취업계수는 각각 118.6, 70.4였는데, 1990년대에는 39.7로 줄어들고 2000년대에는 더 감소하여 26.8로 낮아졌다(<표 3-1> 참고).

취업자 증감도 1970년대에는 44만 3천명이 증가하고 1980년대에는 39만 6천명이 증가한 데 비해, 1990년대에는 27만 3천명 증가에 그쳤고 2000년대에는 32만 2천명이 증가하였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근에 들어올수록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시기별 고용증가율과 GDP증가율

(단위: 천명, %)

구분	취업자	취업계수	고용증가율	실질GDP증가율	고용탄성치	취업자증감
1971~79년	11,846	118.6	3.9	10.3	0.39	443
1980~89년	15,228	70.4	2.6	8.6	0.25	396
1990~99년	19,754	39.7	1.5	6.7	0.37	273
2000~09년	22,612	26.8	1.5	4.4	0.13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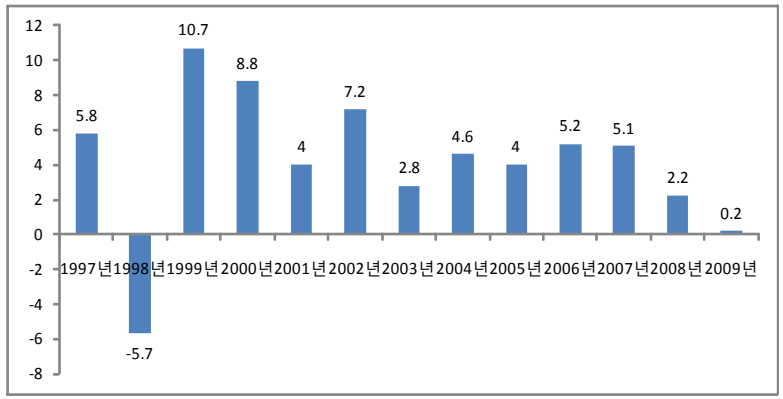
주: 취업계수=실질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실질GDP증가율

자료: 통계청

이제는 구체적으로 최근의 경제성장률, 취업자,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고용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추이가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그림 3-1] 경제성장률 추이: 1997년~200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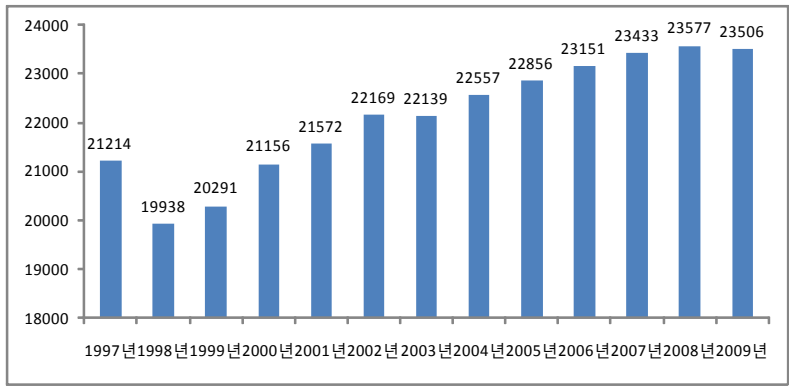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우선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연도별 국제환경 및 경제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보통 4~6%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 참

고).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해는 1999년으로 10.7%이고 가장 낮은 해는 1998년 -5.7%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에 경제위기를 겪었던 1998년과 2009년에는 각각 -5.7%, 0.2%로 마이너스 성장이나 거의 성장이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이 해들을 제외하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1998년은 IMF 외환위기, 2008년 말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부적 요인보다는 국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던 셈이다. 2000년대에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9년을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것이 2002년에 7.2%였고 가장 낮았던 해는 2008년 2.2%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에는 경제성장률이 2~7% 사이에서 결정되어 왔다. 이런 결과는 한국경제의 구조가 선진국 구조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일시적인 경제침체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2000년대의 추이를 경제성장률이 2% 이상 낮아진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 취업자 수 추이: 1997~2009년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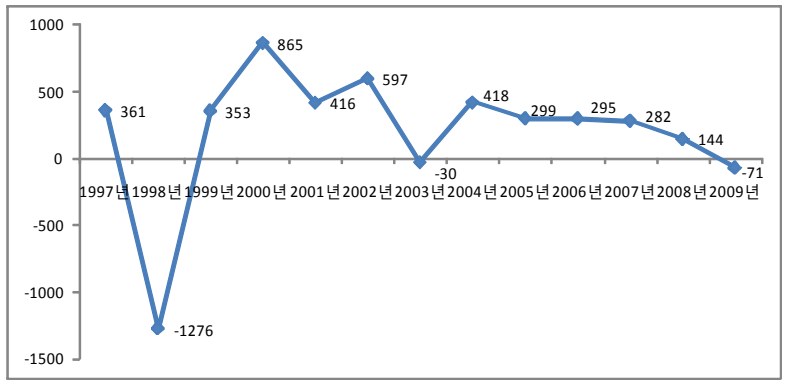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다음으로 취업자 수를 추이를 보면 [그림 3-2]와 같다. 취업자 수는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서 그 증가수준을 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다. 취업자 수는 경제위기 시기였던 1998년과 2009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2.8%에 불과했던 2003년에도 약간 감소하였다. 2009년 현재 취업자 수는 23,506천명이고 이것은 2008년 23,577명에 비해 71천명이 줄어든 숫자이다.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 1997년에 21,214천명이던 것이 1998년에 19,938로 급격히 줄었다가 1999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에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23,577명에 이르렀다.

[그림 3-3] 취업자 수 증감 추이: 1997~2009년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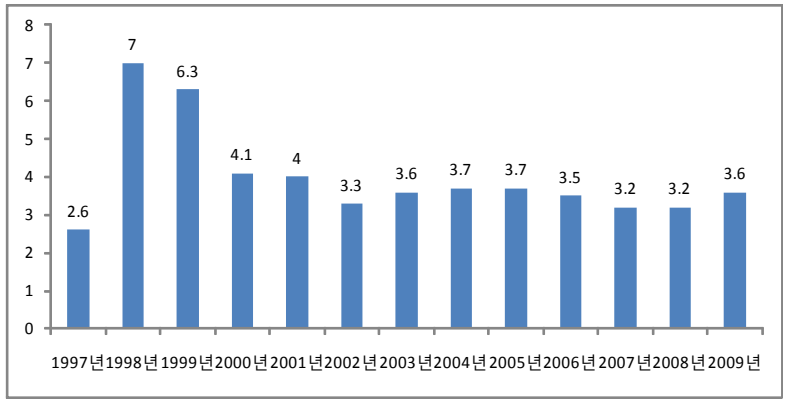
이런 점은 취업자 수 증감추이를 나타낸 [그림 3-3]을 보면 더 잘 볼 수 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1998년, 2003년, 2009년으로 각각 1,276천명, 30천명, 71천명이 감소하였다. 외환위기로 인한 고용조정이 대규모로 일어났던 1998년에 가장 취업자 수 감소가 커서 100만명이 넘게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 2003년과 2009년에는 3만명, 7만명 정도 감소하였다. 취업자 수 증감 곡선을 보면 1990년대 후반에는 급격한 변동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 2000년대 들어서는 안정을 되찾아서 20만~30만명 정도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성장에 따른 고용효과 수준도 감소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고용관련 요인들도 작용하겠지만 경제성장률이 3~4% 정도가 되면 안정적인 취업자 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용상황을 더 알아보기 위해 실업률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여 실업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노동자의 완전고용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성장은 그에 못 미치는 '고용없는 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실업률을 최소 수준으로 낮추고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실업률 추이는 보면 2000년대 이후에는 3%~4%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97년에는 2.6%였던 실업률이 1998년에 7.0%로 급격히 올라갔다가 1999년에는 6.3%, 2000년에는 4.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후에는 실업률은 3.2%에서 3.7%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3-4] 참고). 2000년대 들어 급격한 경제성장이 없었던 점을 반영하여 실업률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자 수가 약간 증가했던 2004년과 2005년에 실업률이 3.7%로 높게 나타났던 것도 2000년대 들어 실업수준이 대폭 감소되지는 못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이후에는 경제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실업률이 3.5%, 3.2%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다시 실업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4] 실업률 추이: 1997~2009년

(단위: %)



자료: 통계청

다음으로 2008년과 2009년의 주요 고용관련 동향을 정리해 보면 <표 3-2>와 같다. 2009년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40,092천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24,394천명이다. 이 중에서 취업자는 23,506천명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8%이고,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58.6%, 3.6%이다.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를 경험한 탓에 2000년대 중반보다는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실업률은 약간 증가한 상태에 있다. 2009년의 고용동향은 2008년에 비해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실업률 모든 측면에서 약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주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구분	2008	2009
생산가능인구	39,598	40,092
경제활동인구	24,347	24,394
증감률	0.5	0.2
취업자	23,577	23,506
증감률	0.6	-0.3
증감수	1.45	-71
경제활동참가율	61.5	60.8
고용률	59.5	58.6
실업자	769	889
실업률	3.2	3.6
비경제활동인구	15,251	15,698
증감률	2.0	2.9

자료: 통계청, KOSIS

<표 3-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성장률도 이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2.2%, 2009년에는 0.2%에 불과하였다. 2000년대 평균 경제성장률이 4.4%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일시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2010년에는 4.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는 하다. 올 상반기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전망한 것처럼 경제성장률은 4.5%, 취업자 증가율은 0.9%, 실업률은 3.6%, 고용률은 58.6%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도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실업률이나 고용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2010년 취업자 전망

구분	2008	2009	2010		
			상반기[p]	하반기[p]	연간[p]
경제성장률(%)	2.2	0.2	5.8	3.3	4.5
취업자(천명)	23,577	23,506	23,526	23,903	23,714
증가율(%)	0.6	-0.3	0.9	0.8	0.9
증감(천명)	144	-72	205	201	203
실업자(천명)	769	889	939	828	884
실업률(%)	3.2	3.6	3.8	3.3	3.6
고용률(%)	59.5	58.6	58.3	58.9	58.6
취업계수(명/10억원)	24.1	24.0	23.7	22.6	23.2

주: 1) p는 전망치
2) 실업자는 구직기간 4주 기준
3) 증감의 상·하반기는 전년 동반기 대비, 연간은 전년대비 수치
4) 취업계수는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5) 고용률=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0)

<표 3-4> 2010년 산업별 취업자 전망

구분	2008	2009	2010	2009~10	
				증감	증감률
<전 체>	23,577	23,506	23,709	203	0.9
○농림어업	1,686	1,648	1,633	-15	-0.9
○광공업	3.985	3,859	3,842	-17	-0.4
-제조업	3,963	3,836	3,818	-18	-0.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906	17,998	18,237	239	1.3
-건설업	1,812	1,720	1,760	40	2.3
-도소매·음식숙박업	5,675	5,536	5,497	-39	-0.7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786	2,761	2,821	60	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7,633	7,981	8,160	179	2.2

자료: 통계청

한편 산업별로 취업자를 살펴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분류하면 3차 산업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3-4> 참고). 그 추이를 보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농림어업'(-0.9%), '광공업'(-0.4%), '도소매음식숙박업'(-0.7%)이고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건설업'(2.3%), '전기운수통신금융업'(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2%)이다. 즉 서

비스업은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연령별로는 경제 환경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의 취업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5> 참고). 2008년과 2009년 두 해에 걸쳐 39세 이하의 연령계층의 취업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9세 이하의 젊은 층의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및 고용사정의 악화로 인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청년층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에는 남자는 0.7% 증가하였고, 여자는 0.5%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남자는 0.2% 증가한데 비해 여자는 1.0% 감소하였다.

<표 3-5> 연령층 및 성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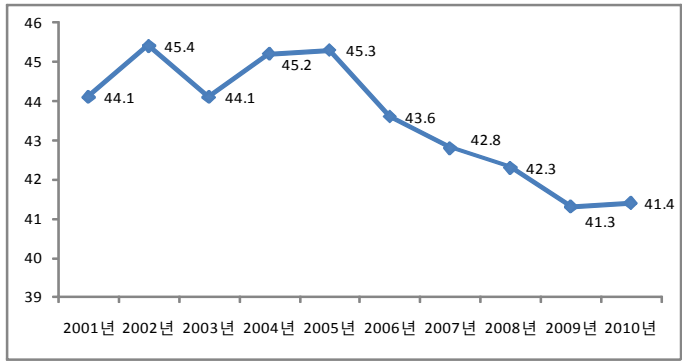
(단위: 전년대비, 천명, %)

구분	2007	2008	2009	2008		2009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체>	23,433	23,577	23,506	145	0.6	-72	-0.3
15~19세	211	190	178	-21	-9.8	-12	-6.5
20~29세	3,992	3,894	3,779	-98	-2.5	-115	-3.0
30~39세	6,035	6,010	5,837	-26	-0.4	-173	-2.9
40~49세	6,484	6,548	6,524	64	1.0	-24	-0.4
50~59세	4,093	4,300	4,498	207	5.1	198	4.6
60세이상	2,618	2,636	2,690	18	0.7	54	2.1
남자	13,607	13,703	13,734	96	0.7	31	0.2
여자	9,826	9,874	9,772	48	0.5	-103	-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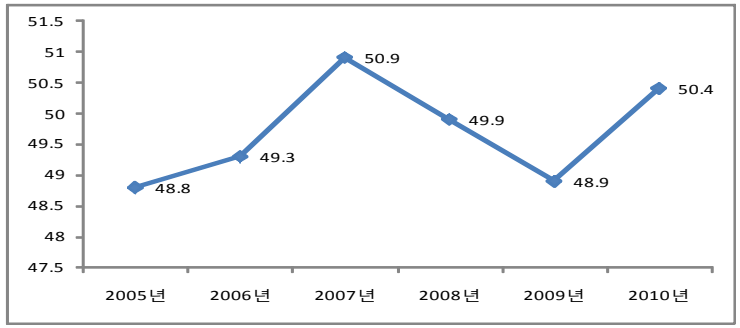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률 추이를 보면 이런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그림 3-5], [그림 3-6] 참고).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2001년에 44.1%, 2002년에 45.4%처럼 40% 중반에 위치했던 것이 2005년에 45.3%를 기록한 이후에는 점차로 고용률이 감소하여 2010년에는 41.4%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9년 경제위기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몇 년 전부터 점차로 청년층의 고용률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 청년층(15~29세)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3-6] 고령층(55~79세)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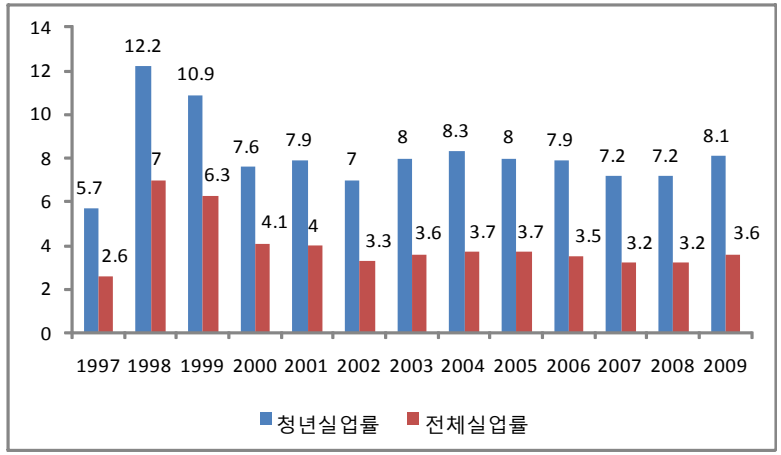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고령층(55~79세)의 고용률 추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령층의 고용률은 2005년에 48.8%, 2006년에 49.3%이던 것이 2009년에는 48.9%, 2010년에는 50.4%로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지는 경향까지 보이기도 한다.

[그림 3-7] 청년층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한편 최근 들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 전체 실업률이 증가한 것에 비례해서 청년층의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3-7] 참고). 1997년에 청년층 실업률은 5.7%에 불과했는데, 2009년에는 8.1%로 2.4%나 증가하였다. 청년층 실업률은 2000년대 내내 7~8%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1990년대에 비해 2% 정도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 산업 및 직업별 노동시장 변화

이처럼 전반적인 고용동향 속에서 산업별 및 직업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산업별로는 2009년에 취업자가 감소한 산업은 '제조업'(-12만명), '건설업'(-9만명), '도소매음식숙박업'(-13만명),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17만명)이고,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사회서비스업'(+39만명)이다. 1997년 이후 경제위기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취업이 감소하는 산업은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취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6> 연도별 산업별 취업자 증감추이

(단위: 천명)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제조업	-188	-620	110	-43	-51	-127
건설업	44	-447	-105	16	-37	-92
도소매음식숙박업	181	-301	169	-38	-47	-139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133	-55	69	201	74	-176
사회서비스업	81	160	131	88	190	39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4	87	125	-4	43	192
-교육서비스업	46	35	-17	38	44	4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3	33	25	59	102	156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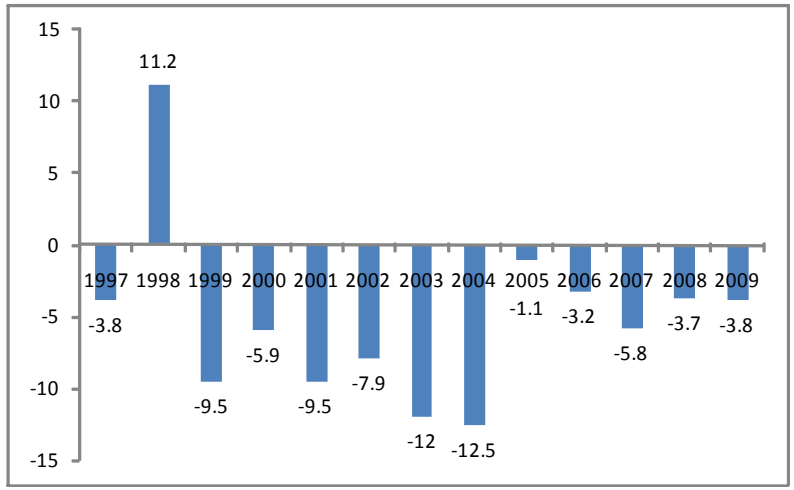
산업별 취업자 증감추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사회서비스업의 경우를 연도별로 알아보았다.

우선 농림어업은 일반적으로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취업자 수 증감추이는 마이너스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3-8] 참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추이는 1997년에 3,800명 감소한 데 이어 예외적으로 1998년에는 11,200명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해마다 조금씩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취업자 수 감소가 있었던 해는 2004년으로 12,500명이고, 가장 적게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해는

2005년으로 1,100명이 감소하였다. 농업어업의 취업자는 경제성장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줄어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3,000명~6,000명 정도씩 줄어들고 있다.

[그림 3-8] 농림어업의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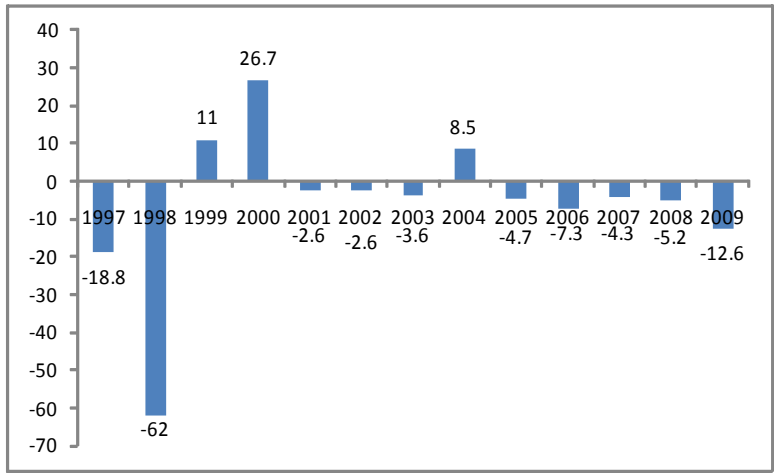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제조업은 산업사회가 되면서 급속히 증가하는 산업에 해당되지만 이제는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산업도 감소 추세에 있는 산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18,800명, 62,000명이 감소하였던 것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경우이고, 해마다 경기상황에 따라 약간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3-9] 참고). 이런 상황은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줄어드는 조건에 있지만 특정 제조업의 경우는 국제시장의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년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은 취업자 수가 증가한 해도 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한 해는 1999년, 2000년, 2004년으로 각각 1,100명, 26,700명, 8,500명이 증가한 바 있다. 2000년 이후에는 10년 동안 두 번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나머지 해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수치는 비교적 많은 경우가 아니다. 2000년대에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해는 경제위기를 겪었던 2009년으로 12,6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경우는 2,000명~7,000명 사이에서 감소폭이 이루어졌다. 이를 보면 제조업은 일반적인 경기상황에서는 감소경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특정 업종의 경우 경기상황이 호황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 제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림 3-9] 제조업의 연도별 취업자 증감추이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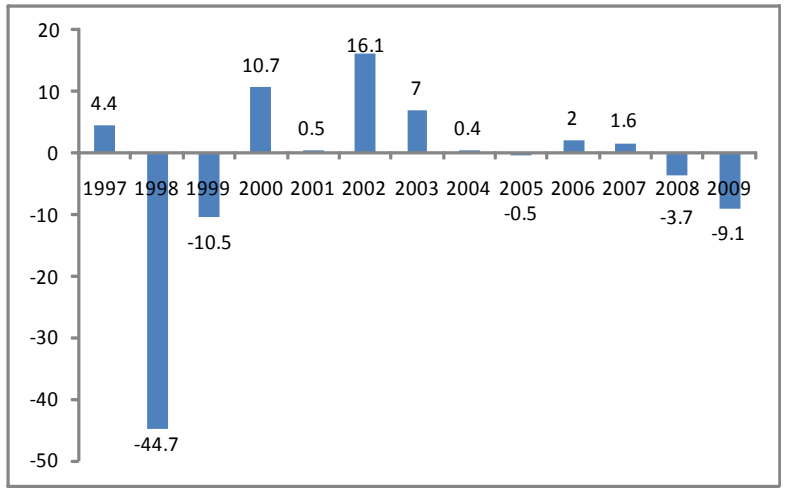
건설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변화하더라도 건설업의 성격상 일반적인 경제여건이라면 새로운 건설 분야가 창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평균적인 상황을 유지된다면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건설업의 취업자 수 증감 추이를 보면 경제위기 상황이었던 1998년,

1999년, 2008년, 2009년을 제외하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3-10] 참고). 2000년 이후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해는 2005년과 2009년으로 각각 500명, 9,100명만이 감소했을 뿐이다. 이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한 해는 증가량이 많을 경우에는 2000년에 10,700명, 2002년에는 16,100명이 늘어났고, 다른 해에는 400명~7,000명 정도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건설업은 내부적 성장요인을 많이 지니고 있는 산업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만 외부적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0] 건설업의 연도별 취업자 증감추이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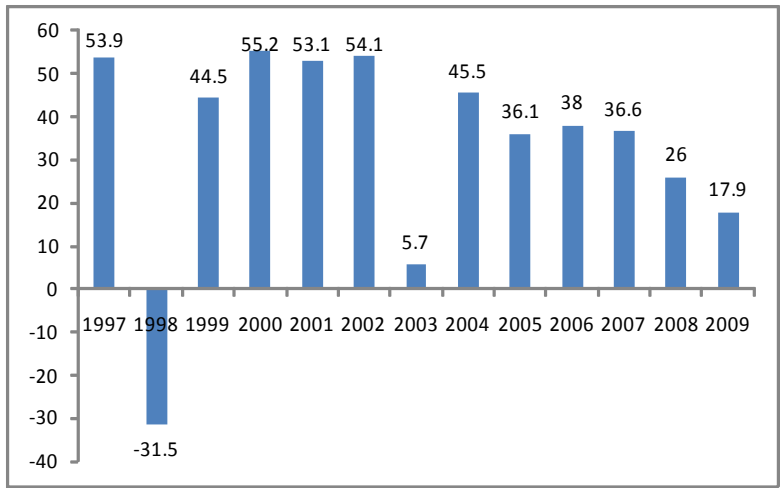
서비스업은 현대자본주의 발전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주의의 산업구조 변화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산업화 초기에 제조업 중심이던 산업사회가 발전하게 될수록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게 마련이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도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사회도 이미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

에서 취업자 수 증감추이에서도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은 1998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31,500명 감소한 해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3-11] 참고).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 증가 수준에 있어서도 다른 산업의 증가 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서비스업에는 교육, 보건, 행정 등 산업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수요 및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증가 추세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3-11] 서비스업의 연도별 취업자 증감추이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감추이는 1998년에 예외적인 상황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매년 40,000명 정도씩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해는 2000년으로 55,200명이 증가하였고, 가장 적게 증가한 해는 2003년으로 5,700명이 증가하였다. 해마다 증가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서비스업은 약 40,000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서비스업도 전체 경제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

는 것이 당연하지만, 경제상황이 커다란 불황이 아닌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직업별로 취업자 수 증감추이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 시인 1998년에는 거의 모든 직업이 감소하였다. 특히 생산직의 감소가 가장 컸던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에는 판매서비스직과 기능직의 감소가 가장 크다. 이런 점은 직업별 취업자 증감추이는 해당 시기의 경제환경에 따라 커다랗게 좌우되며, 경제위기 시에는 여러 직종에 걸쳐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7> 참고). 특히 2008년과 2009년에는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이 함께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단순노무직과 전문기술직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표 3-7> 연도별 직업별 취업자 증감추이

(단위: 천명)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무관리전문기술직	191	-136	-48	225	378	145
-관리직	-21	-20	-32	-1	-52	-3
-전문기술직	199	46	169	210	332	44
-사무직	13	-162	-185	16	98	104
판매서비스직	191	-192	99	-27	-35	-156
생산직	21	-1,057	413	138	-147	-17
-기능직	-53	-667	66	-27	-23	-148
-장치기계조작조립원	19	-125	13	4	-61	-17
-단순노무직	55	-265	334	161	-63	148

자료: 통계청, KOSIS

각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우선 사무관리전문기술직은 경제위기 시인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136,000명, 48,000명 감소하였지만, 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무관리전문기술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에서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판매서비스직은 넓은 의미에서 사무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업무 성격상 경제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아 1999년에 99,000명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1998년에 192,000명이 감소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27,000명, 35,000명, 156,000명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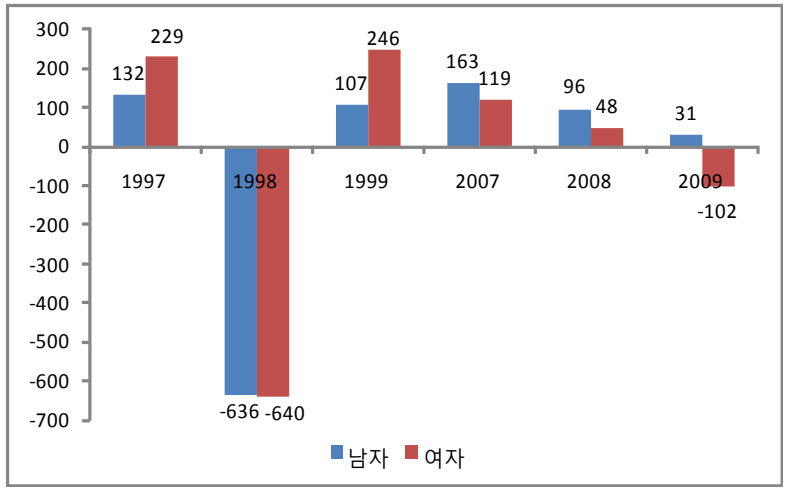
생산직은 경제위기 시에는 감소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산직이 감소한 해는 1998년, 2008년, 2009년으로 각각 1,057,000명, 147,000명, 17,000명이 감소하였다. 생산직이 증가한 해인 1999년과 2007년에는 각각 413,000명, 138,000이 증가하였다. 생산직 중에서도 단순노무직의 취업자 증가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직은 1999년에는 334,000명, 2007년에는 161,000명, 2009년에는 148,000명이 증가하여 생산직의 취업자 수 증가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앞에서 다룬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인적 속성(성별, 연령별, 학력별 요인)에 따른 취업자 증감추이를 알아보았다.

우선 남녀 성별에 따른 취업자 증감 추이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데 실제로도 이런 경향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 시기인 1998과 2009년에 남자보다 여성의 취업자 감소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12] 참고).

[그림 3-12] 성별 취업자 증감추이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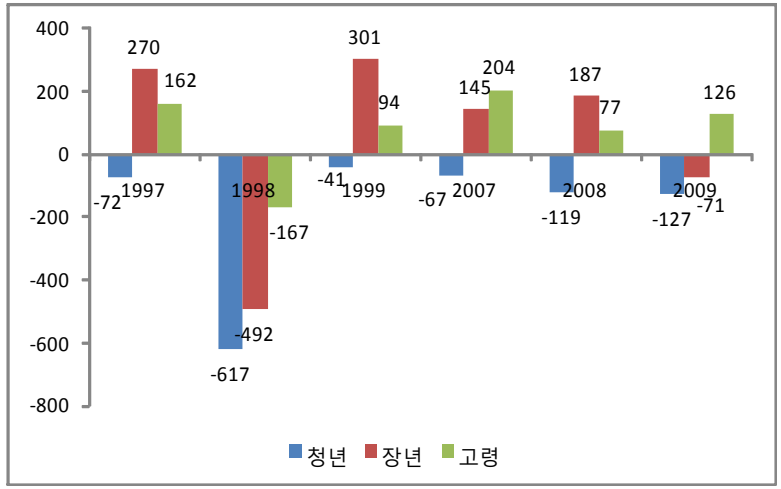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1998년에는 남자는 636,000명이 감소하였는데 여자는 640,000명이 감소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4,000명이 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에는 남자는 31,000명이 증가한데 비해 여자는 102,000명이 감소하여 더욱 더 남녀 간 취업자 증감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증가한 해에는 1997년과 1999년에는 여자 취업자 증가가 더 많게 나타났고, 2007년과 2008년에는 남자 취업자 증가가 더 많이 나타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취업증가가 높게 나타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연령별 취업자 증감추이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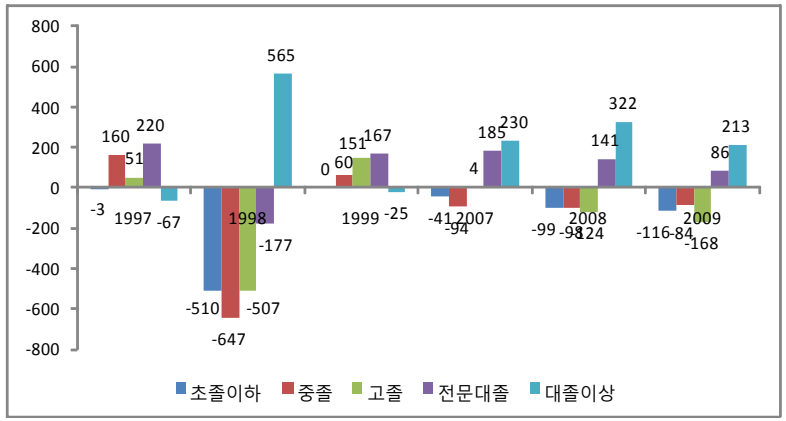
연령별 취업자 증감추이를 볼 때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사회의 경우에도 이런 추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998년 경제위기 상황에는 청년, 중년, 고령의 취업자 수가 모두 감소하였지만, 청년은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년과 고령노동자의 고용이 증가하였던 1997년, 1999년, 2007년, 2008년에도 청년노동자의 고용은 각각 72,000명, 41,000명,

67,000명, 119,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중년노동자는 1998년과 2009년과 같은 특별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만 고용이 감소하였을 뿐 다른 해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령노동자의 경우도 1998년만 제외하면 매년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지 않는 경향이 있고 경력사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령노동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공공근로 등과 같은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취업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14] 학력별 취업자 증감추이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한편 학력별 취업자 증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의 고학력화 경향으로 인하여 경영자 측에서는 대졸이상 학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력별 취업추세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기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7년과 1999년에는 취업자 증가 수에 있어서 전문대졸이 가장 많아서 각각 220,000명, 167,000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대졸이상의 취업자 증가 수가 크게 증가하여, 각각 230,000명, 322,000명, 213,000명으로 가장 많은 취업증가를 보이고 있다.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는

해가 갈수록 취업자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졸이하는 1997년에 3,000명이 감소하였던 데 비해 2007년에는 41,000명, 2008년에는 99,000명, 2009년에는 116,000명이 감소하였다. 중졸의 경우는 1997년에는 160,000명이 증가하였는데, 2007년에는 94,000명이 감소하였고 2008년에는 98,000명, 2009년에는 84,000명이 감소하였다. 고졸의 경우는 1997년에 51,000명이 증가하였는데 2007년에는 94,000명이 감소하였고, 2008년에는 124,000명, 2009년에는 168,000명이 감소하였다. 이처럼 고졸이하 취업자 수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고용형태별 노동시장 변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0년 현재 임금노동자 1,704만명 중에서 859만명으로 그 비중이 50.4%이다(<표 3-8> 참고). 아직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 중에서 절반이 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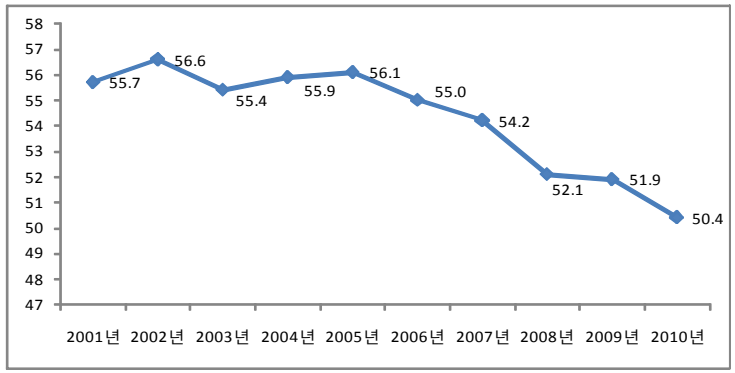
<표 3-8>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 천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노동자	15,882(100.0)	16,104(100.0)	16,479(100.0)	17,047(100.0)
정규직	7,268(45.8)	7,707(47.9)	7,934(48.1)	8,455(49.6)
비정규직	8,614(54.2)	8397(52.1)	8,545(51.9)	8,592(50.4)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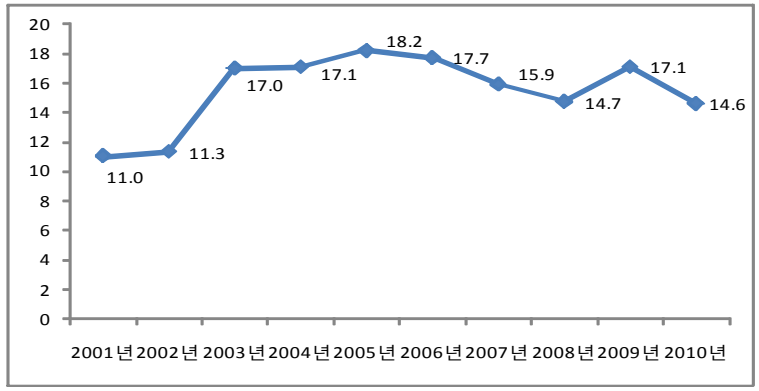
[그림 3-15] 비정규직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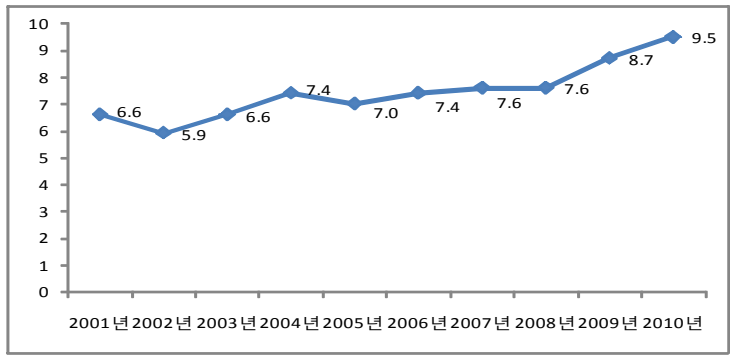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에는 54.2%, 2008년에는 52.1%, 2009년에는 51.9%, 2010년에는 50.4%로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비정규직 비중 감소는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3] 참고). 비정규직 비중은 2001년에는 55.7%, 2002년에는 56.6%로 2010년 현재 50.4%는 이와 비교하면 약 5~6%가 줄어든 것이다.

[그림 3-16] 기간제 고용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3-17] 시간제 고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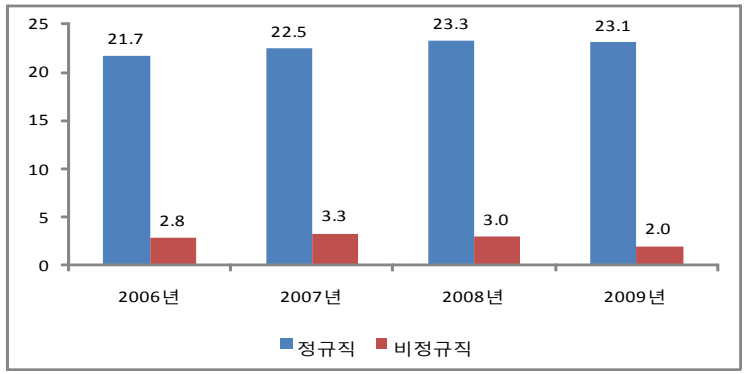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비정규직은 크게 기간제와 시간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그림 3-16]와 [그림 3-17]와 같다. 기간제는 2001년에 11.0%였던 것이 2010년에는 14.6%로 약간 높아진 상태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14%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제는 2001년에 6.6%였던 것이 2010년에는 9.5%로 증가한 상태이다. 시간제는 그 비중이 크게 변화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



자료: 통계청

한편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9년 현재 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은 23.1%인 데 비해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은 2.0%에 불과하다([그림 3-18] 참고).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은 2006년에는 2.8%였던 것이 이제는 2.0%로 줄어듦으로써 사회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합원 수로 보면 2009년 현재 정규직은 183만 2천명이고 비정규직은 17만 1천명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규모가 절반을 넘고 임금 및 고용조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은 커다란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분명히 노동자라는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결성도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현실이며, 저임금 상황에 놓여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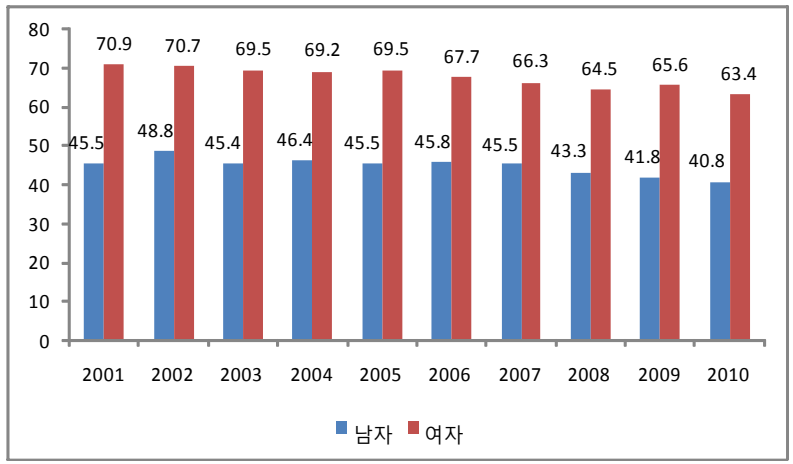
비정규직 문제는 인적 속성 측면에서도 사회적 분화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별,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에 있다. 우선 성별 비정규직 규모를 보면 2010년 현재 비정규직 비중에서 남자는 40.8%인데 비해 여자는 63.4%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22.6%나 많다([그림 3-19] 참고). 이 점은 비정규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율 및 취업률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데다가, 취업자 중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모든 경우에 있어서 비정규직 비중이 약간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에 남자 비정규직과 여자 비정규직의 비중은 각각 45.5%와 70.9%였던 것이 2010년에는 남자 비정규직과 여자 비정규직의 비중이 각각 40.8%와 63.4%로 감소하였다. 남자는 비정규직 비중이 4.7% 감소하였고 여자는 비정규직 비중이 7.5% 감소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전반에는 남녀 모두 비정규직 비중이 45%와 70%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에 들어 5% 포인트 정도 감소하여 각각 40%와 65%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점점 높아져 그 규모를 감소시키려는 정책들이 추진되기도 하고, 노동조합이나 여성단체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비정규직에서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는 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9] 성별 비정규직 규모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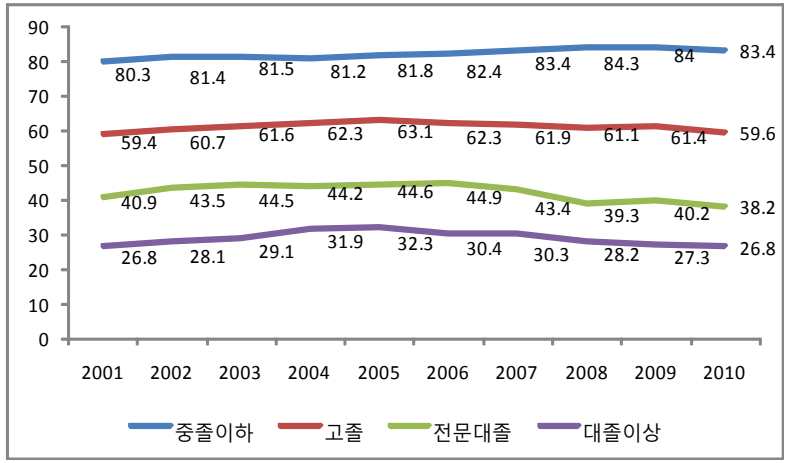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학력별로도 비정규직 규모에서 분명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10년 현재 중졸이하의 비정규직 비중은 83.4%, 고졸은 59.6%, 전문대졸은 38.2%, 대졸이상은 26.8%이다([그림 3-20] 참고). 즉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중에 일정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졸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비정규직 비중의 학력별 격차는 중졸이하는 비정규직 비중이 56.6%나 많고, 고졸은 32.8%, 전문대졸은 11.4%가 많다. 이런 차이는 2000년대 내내 커다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3-20]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학력별 비정규직 비중의 추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학력별 격차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학력이 낮을수로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조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졸이하의 경우 2001년에는 비정규직 비중이 80.3%였는데 2010년에는 83.4%로 3.1% 포인트 증가하였는 데 반해, 대졸이상의 경우는 2001년에 26.8%였던 비정규직 비중이 2010년에도 동일하게 26.8%로 유지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중 곡선은 중졸이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대졸이상은 약간 증가하다가 2007년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졸과 전문대졸도 대졸이상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중졸이하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9>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 천명, %)

구 분	2009년 8월			2010년 8월			증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농림어업	12	150	92.6	12	158	92.9	0	8	0.3
광업	14	6	30.0	14	5	26.3	0	-1	-3.7
제조업	2,179	1,043	32.4	2,417	1,064	30.6	238	21	-1.8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84	11	11.6	70	7	9.1	-14	-4	-2.5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38	25	39.7	43	20	31.7	5	-5	-8.0
건설업	447	878	66.3	491	897	64.6	44	19	-1.7
금융보험업	385	330	46.2	447	333	42.7	62	3	-3.5
부동산임대업	92	210	69.5	112	215	65.7	20	5	-3.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48	173	24.0	574	160	21.8	26	-13	-2.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48	764	83.8	173	850	83.1	25	86	-0.7
도소매업	709	1,222	63.3	776	1,240	61.5	67	18	-1.8
운수업	428	246	36.5	459	234	33.8	31	-12	-2.7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449	160	26.3	447	153	25.5	-2	-7	-0.8
숙박음식점업	121	981	89.0	122	1,012	89.2	1	31	0.2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70	161	69.7	68	161	70.3	-2	0	0.6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257	399	60.8	269	389	59.1	12	-10	-1.7
가구내고용활동등		138	100		139	100		1	0.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650	528	44.8	634	330	34.2	-16	-198	-10.6
교육서비스업	772	696	47.4	721	693	49.0	-51	-3	1.6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522	422	44.7	595	528	47.0	73	106	2.3
국제외국기관	11	2	15.4	11	3	21.4	0	1	6.0
전산업	7,936	8,545	51.8	8,455	8,591	50.4	519	4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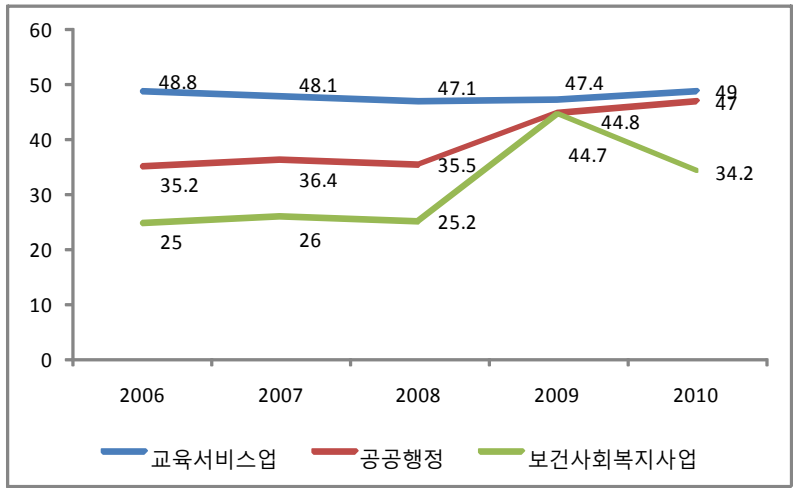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별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이 92.9%, 광업이 26.3%, 제조업이 30.6%,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은 9.1%, 건설업은 64.6%로 업종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3-9> 참고). 다음으로 서비스산업 중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많은 업종을 보면 부동산임대업 65.7%, 사업시설관리업 83.1%, 도소매업 61.5%, 숙박음식점업 89.2%,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70.3%,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59.1%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전산업을 통해 볼 때 비정규직 비중이 50.4%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1] 사회서비스업 비정규직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한편 서비스산업 중에서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사업의 비정규직 비중도 34~49%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서비스산업은 공공부문에 속한 부문도 있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업종에 해당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현재 이들 업종의 비정규직 비중은 교육서비스업이 49.0%, 공공행정이 47.0%, 보건사회복지사업이 34.2%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5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에 있어서도 세 업종 모두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사업은 2010년에는 2009년 44.7%에서 1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에 세 업종의 비정규직 비중은 교육서비스업 48.8%, 공공행정 35.2%, 보건사회복지사업 25.0%였던 것이 2010년에는 각각

49.0%, 47.0%, 34.2%로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였다.

<표 3-10>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 천명, %)

구 분	2009년 8월			2010년 8월			증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관리자	305	45	12.9	332	56	14.4	27	11	1.5
전문가	2,397	1,159	32.6	2,478	1,211	32.8	81	52	0.2
사무직	2,479	894	26.5	2,673	876	24.7	194	-18	-1.8
서비스직	370	1,136	75.4	384	1,164	75.2	14	28	-0.2
판매직	337	1,111	76.7	353	1,121	76.1	16	10	-0.6
농림어업숙련직	10	48	82.8	10	57	85.1	0	9	2.3
기능직	602	970	61.7	634	997	61.1	32	27	-0.6
장치기계조작조립원	1,087	635	36.9	1,211	609	33.5	124	-26	-3.4
단순노무직	347	2,548	88.0	380	2,502	86.8	33	-46	-1.2
전체	7,934	8,545	51.9	8,455	8,593	50.4	519	46	-1.4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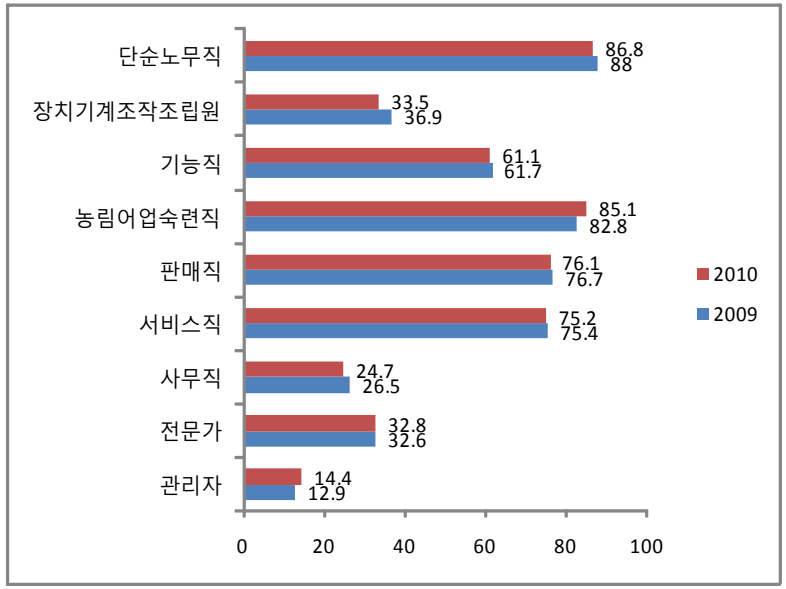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에서는 그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단순노무직 86.8%, 농림어업숙련직 85.1%, 판매직 76.1%, 서비스직 75.2%, 기능직 61.1%, 장치기계조작조립원 33.5%, 전문가 32.8%, 사무직 24.7%, 관리자 14.4% 순으로 되어 있다(<표 3-10>, [그림 3-22] 참고).

여기에서 보면 비정규직 비중이 50%를 넘는 직업은 단순노무직, 농림어업숙련직, 판매직, 서비스직, 기능직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직업 지위가 비교적 낮거나 고용관계가 비정규직인 형태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들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50% 미만인 직업들은 관리자, 사무직, 전문가, 장치기계조작조립원이다.

2009년과 비교해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한 직업은 관리자(1.5%), 전문가(0.2%), 농림어업숙련직(2.3%)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한 직업은 사무직(-1.8%), 서비스직(-0.2%), 판매직(-0.6%), 기능직(-0.6%), 장치기계조작조립원(-3.4%), 단순노무직(-1.2%)였다.

[그림 3-22]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 %)



자료: 통계청

4. 소결

한국 노동시장은 최근 들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경향과 함께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1998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국제경제 환경에 의해 경제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순조로운 고용발전(employment development)에 장해물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이런 조건 속에서 노동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률에 비례적으로 고용이 발전하는 수준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해 낮게 맞추어졌다. 성장률 자체도 이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에서 고용발전 속도도 늦어지면서, 실업률이 1990년대의 2%대에서 2000년대에는 3%로 유지되고 있고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고용불안이 증가하면서 더욱 더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청년 취업률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산업구조는 이미 제조업은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들어섰다. 이를 반영하여 노동시장에서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고용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포괄하는 업종의 범위가 다양하여, 이 중에서 고용감소가 이루어지는 업종도 있고 고용증가가 이루어지는 업종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업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사회서비스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는 고용 추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은 사무관리전문직과 단순노무직이고, 판매서비스직과 기능직은 고용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직업이다. 성별로는 여성의 고용감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력별로는 저학력일수록 고용감소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최근 들어 고용구조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00년대 내내 50%를 상회하고 있고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줄어들 전망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중에서 파트타임과 같은 시간제 노동자의 규모는 점점 증가할 전망에 있고, 기간제 노동자는 노동법 및 노사정에 의한 규제에 의해 규모가 감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비정규직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정규직과의 임금 및 노동조건, 기업복지, 사회보험에서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성별, 학력별 격차가 존재한다. 성별로는 여성의 대부분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남성도 비정규직이 40%대에 이르고 있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자는 8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대졸이상은 20%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학력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해당 산업의 업무특성과 고용관행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직업별로도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직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처럼 한국 노동시장 구조는 1990년대부터 급격하게 진전된 고용조정 및 경제침체 과정의 영향으로 '고용 불안'이 지속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비중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청년실업과 같은 실업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중장기적 과제로 남아 있다. 노사정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구조의 이런 특성은 노동조합의 조직기반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현재도 여러 산업 및 직종의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제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서비스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란 조직화는 미진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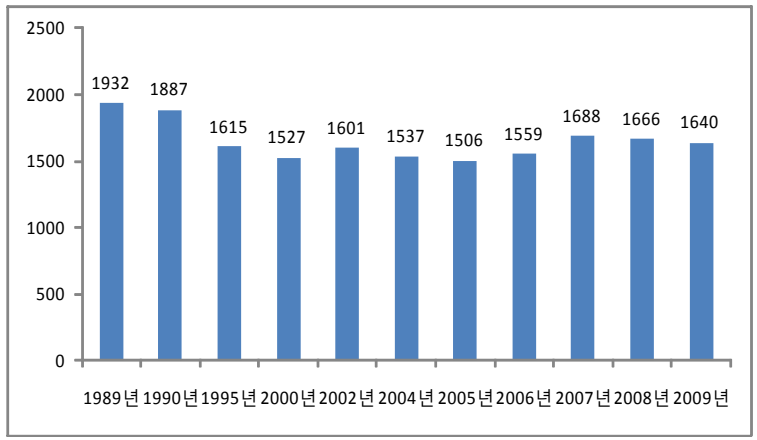
제4장. 노조 조직기반 변화

1. 노조 조직상황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9년 현재 10.1%이고 조합원 수는 1,640,334명이다. 연도별 조합원 수 추이를 보면 1989년에 193만 명에서 이후 계속해서 매년 감소해서 2005년에 150만명까지 내려갔다가 현재의 164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4-1] 참고). 노조조직률 면에서도 1989년에 19.8%이던 것이 2009년에는 10.1%로 9.7%나 감소되었다. 노조조직률 측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198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조조직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그림 4-1] 연도별 조합원 수 추이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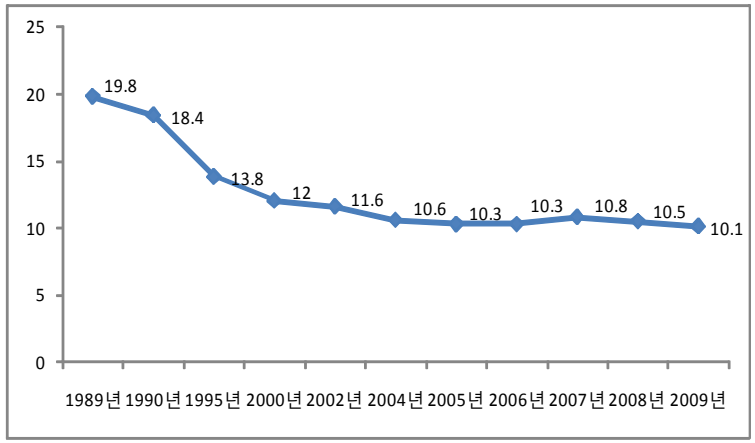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2010)

노조조직률은 전체조합원 수를 조직대상 근로자 수로 나눈 것인데, 2009년 현재 조직대상 근로자 수는 34만 9천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는 2만 6천명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노조조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주제인 노동시장의 변화로 제조업은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이 증가하는 조건 속에서, 서비스산업은 노조조직화가 어려운 부문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직도 노조에 협력적이지 않은 경영자의 태도 및 새로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여러 조건이 결합되어 노조조직률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노조의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 연도별 노조조직률 추이



자료: 노동부(2010)

조합원 수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분류해 보면,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739,857명, 민주노총이 590,386명으로 한국노총이 14만명 정도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조합원 수는 그 비중으로 보면 한국노총은 45.1%, 민주노총은 35.9%, 미가맹이 19.0%로 되어 있다. 한국노총은 2009년에 전년도에 비해 14,843명이 증

가하였고 민주노총은 67,732명이 감소되었다. 이 이유는 민주노총에서는 주요 사업장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4-1>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비교

(단위: 명, %)

상급단체	2008년	2009년	증감
한국노총	725,014(43.5)	739,857(45.1)	14,843(2.0)
민주노총	658,118(39.5)	590,386(36.0)	-67,732(-10.3)
미가맹	282,666(17.0)	309,722(18.9)	27,056(9.6)
전체	1,665,798(100.0)	1,639,965(100.0)	-25,833(-1.6)

자료: 노동부(2010)

<표 4-2> 노동조합 수 현황

(단위: 개소)

상급단체	2008년	2009년	증감
한국노총	2,662	2,513(53.6%)	-149
민주노총	538	553(11.8%)	15
미가맹	1,686	1,623(34.6%)	-63
전체	4,886	4,689(100.0%)	-197

자료: 노동부(2010)

상급단체별 노동조합 수를 보면 2009년 현재 한국노총은 2,513개소, 민주노총은 553개소로 나타났다(<표 4-2> 참고). 노동조합 수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 149개가 감소하였고 민주노총은 15개가 증가하였다. 전체적 노동조합 수로 볼 때 민주노총이 한국노총보다 현저히 작게 나타난 것은 많은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노동조합 수가 2009년 현재 4,689개로 전년도에 비해 197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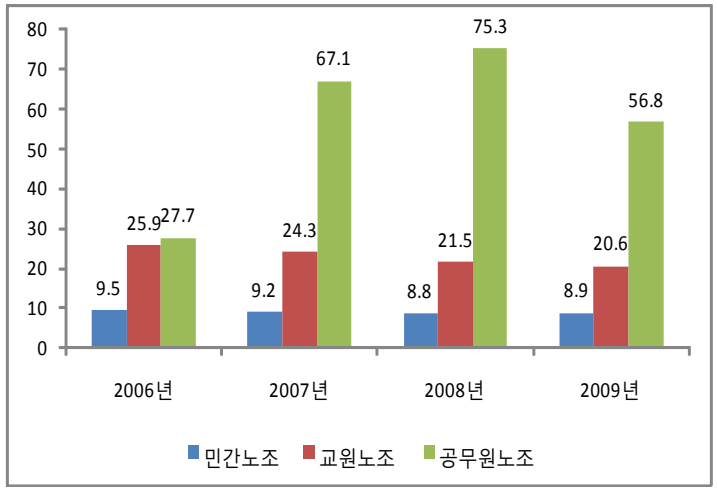
노조조직률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보면, 2009년 현재 민간부문 조직률은 8.9%(1,374천명)에 불과한 데 비해 교원부문은 20.6%(82천명), 공무원부문은 56.8%(184천명)로 공공부문의 조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3] 참고).

민간노조는 조직률이 2006년에 9.5%에서 2009년에 8.9%로 약간 감소되었고, 교원노조는 2006년에 25.9%에서 2009년에 20.6%로 20%대의 조직률을 유지하면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공무원노조는 2006년에

27.7%였다가 2008년에 75.3%로 가장 높은 조직률을 보이다가 최근에 정부의 탄압으로 2009년에는 56.8%로 낮아졌지만 민간부문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조직률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조직률 변화

(단위: %)



자료: 노동부(2010)

민간노조는 2008년에 8.8%에서 2009년에 8.9%로 0.1%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융노조 및 보건의료노조와 같은 서비스부문에서 비정규직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노조는 2008년에 88,204명에서 2009년에는 96,142명으로 증가하였고, 사무금융노련은 9,142명에서 12,54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보건의료노조는 36,522명에서 40,025명으로 증가하였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규모별로 보면, 2009년 현재 조합원 수가 50명 미만인 노동조합이 48.5%(2,274개소)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합원 수는 2.3%(37,411명)에 불과하다(<표 4-3> 참고). 이에 반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3.8%(178개소)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합원 수는 전체의

71.3%(1,169,912명)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대기업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명 이상 기업의 경우는 조직률이 42.4%나 되는 데 반해 30명 미만 기업은 조직률이 0.2%에 불과하다(<표 4-4> 참고).

<표 4-3> 조합원 규모별 조직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50명 미만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명이상	총계
노조수	2,274 (48.5)	790 (16.8)	1,062 (22.6)	223 (4.8)	162 (3.5)	178 (3.8)	4,689 (100)
조합원수	37,411 (2.3)	56,489 (3.4)	176,023 (10.7)	87,435 (5.3)	113,064 (6.9)	1,169,912 (71.3)	1,640,334 (100)

자료: 노동부(2010)

<표 4-4>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

(단위: 명, %)

구분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임금노동자수	9,602,000	3,361,000	1,646,000	1,946,000
조합원수	22,548	98,080	210,046	825,659
조직률	0.2	2.9	12.8	42.4

자료: 노동부(2010)

노조 조직형태 측면에서 노동조합운동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산별노조운동으로 말미암아 기업별노조가 아닌 초기업별노조가 많이 설립되었다. 2009년 현재 초기업별노조는 335개소(868,467명)이고, 기업별노조는 4,354개소(771,867명)이다(<표 4-5> 참고). 이처럼 초기업별노조가 많이 만들어져 조합원 수 비중을 보면 전체 조합원의 52.9%가 초기업별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셈이다.

초기업별노조를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은 473,817명이 가입되어 있어 80.5%의 조합원이 초기업별노조에 속해 있으며 한국노총은 297,662명으로 초기업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이 40.2%이다(<표 4-6> 참고).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비해 초기업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조합원 수 변화 추이를 보면 기업별노조 조합원 수는 2009년에 12,654명이 감소하였고 초기업별노조 조합원 수는 2009년에 12,81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조직형태별 조합원 수 비교

(단위: 개소, 명)

구분	조합수			조합원수		
	2008년	2009년	증감	2008년	2009년	증감
기업별노조	4,526	4,354	-172	784,521	771,867	-12,654
초기업별노조	360	335	-25	881,277	868,467	-12,810
전체	4,886	4,689	-197	1,665,798	1,640,334	-25,464

자료: 노동부(2010)

<표 4-6> 상급단체별 조직현황

(단위: 명, %)

구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조합원수	비율	조합원수	비율	조합원수	비율
전체 조합원수	1,640,334 (100.0)	740,335	100.0	588,394	100.0	311,605	100.0
기업별노조 조합원수	771,867 (100.0)	442,673 (57.3)	59.8	114,577 (14.9)	19.5	214,617 (27.8)	68.9
초기업노조 조합원수	868,467 (100.0)	297,662 (34.3)	40.2	473,817 (54.6)	80.5	96,988 (11.1)	31.1

자료: 노동부(2010)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 현재 노동조합 수는 4,689개이고 조합원 수는 1,640,334명이다(<표 4-7> 참고). 조합원은 남자는 1,285,965명, 여자는 354,369명으로 남자 조합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여자의 취업률이 낮은 측면도 있고 고용형태 측면에서 비정규직이 많은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노조 조직형태로 보면 기업노조는 4,354개, 지역업종노조는 228개, 산별노조는 62개이며, 조합원 수는 각각 771,867명, 95,216명, 773,251명이다. 노조 조직형태상 기업노조가 숫자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있지만 노동조합운동 내의 산별노조운동이 많이 진전되어 산별노조에 속한 조합원도 77만 명이나 되고 있다. 연합단체는

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2개가 있으며, 연합단체는 43개가 있다.

<표 4-7> 노동조합 조직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조합수	조합원수		
		계	남성	여성
총 계	4,689	1,640,334	1,285,965	354,369
○ 단위노조				
- 기업(사업장)	4,354	771,867	619,782	152,085
- 지역업종노조	228	95,216	92,038	3,178
- 산별노조	62	773,251	574,145	199,106
○ 연합단체				
- 총연합단체	2	0	0	0
- 연합단체	43	0	0	0

※ 조직률 = 전체조합원수(1,640천명) / 조직대상 근로자수〔임금근로자수(16,555천명)-노조가입 금지되는 공무원(359천명)〕* 100 = 10.1%
※ 조직대상 근로자 : 15,847천명('08년) → 16,196천명('09년) <349천명(2.2%) 증가>
※ 조합원수 : 1,666천명('08년) → 1,640천명('09년) < 26천명(1.6%) 감소 >
※ 산별노조 : 노조명칭과 노조규약상 전국단위를 표방하는 노조

노동조합 조직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에는 10.1%로 1989년에 19.8%로 높은 조직률을 기록한 이후에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노조조직률은 1990년에는 18.4%, 1995년 13.8%, 2000년 12.0%, 2005년 10.3%로 매년 0.3~0.5%씩 조직률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표 4-8> 참고). 노동조합 수는 1990년대 중반에 민주노총이 건설되면서 산별연맹인 연합단체 수는 1996년에 26개에서 2009년에는 55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단위노조 수는 1989년에 7,861개에서 2009년에는 4,689개로 감소하였다. 단위노조가 감소한 데에는 산별노조가 많이 늘어난 점도 작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노조 수가 줄어든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조합원 수는 2009년 현재 1,640,334명으로 가장 조합원이 많았던 1989년 1,932,415명에 비해 약 30만 명이 감소한 상태에 있다.

<표 4-8> 연도별 노동조합 수와 조직률

구분 / 년도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명)			조직대상 근로자(천명)	조직률(%)
	연합단체	단위노조	분 회	계	남	여		
1965	16	362	2,255	301,522	238,236	63,686	-	-
1966	16	359	2,359	326,974	250,656	76,318	-	-
1967	16	386	2,619	377,576	286,576	91,000	-	-
1968	16	385	2,732	412,906	309,876	103,030	-	-
1969	16	417	2,939	444,783	333,317	111,466	-	-
1970	17	419	3,063	473,259	357,881	115,378	-	-
1971	17	446	3,062	497,671	373,985	123,686	-	-
1972	17	430	2,961	515,292	380,706	134,586	-	-
1973	17	403	2,865	548,054	392,071	155,983	-	-
1974	17	432	3,352	655,785	463,132	192,653	-	-
1975	17	488	3,585	750,235	508,966	241,269	-	-
1976	17	517	3,854	845,630	559,486	286,144	-	-
1977	17	538	4,042	954,727	634,961	319,766	3,752	25.4
1978	17	552	4,305	1,054,608	696,865	357,743	4,229	24.9
1979	17	553	4,394	1,088,061	723,583	364,478	4,461	24.4
1980	16	2,618	3,227	948,134	600,383	347,751	4,516	21.0
1981	16	2,141	-	966,738	628,259	338,479	4,649	20.8
1982	16	2,194	-	984,136	633,106	351,030	4,878	20.2
1983	16	2,238	-	1,009,881	673,411	336,470	5,212	19.4
1984	16	2,365	-	1,010,522	683,542	326,980	5,588	18.1
1985	16	2,534	-	1,004,398	691,911	312,487	5,956	16.9
1986	16	2,658	-	1,035,890	724,566	311,324	6,177	16.8
87.6.30	16	2,725	-	1,050,201	743,209	306,992	6,701	15.7
1987	16	4,086	-	1,267,457	900,129	367,328	6,853	18.5
88.6.30	20	5,062	-	1,525,088	1,094,905	430,183	8,382	18.2
1988	21	5,598	-	1,707,456	1,232,400	475,056	8,764	19.5
89.6.30	22	6,638	-	1,825,093	1,318,422	506,671	9,286	19.7
1989	22	7,861	-	1,932,415	1,402,106	530,309	9,752	19.8
1990	22	7,698	-	1,886,884	1,384,730	502,154	10,264	18.4
1991	22	7,656	-	1,803,408	1,341,745	461,663	10,483	17.2
1992	22	7,531	-	1,734,598	1,323,521	411,077	10,568	16.4
1993	27	7,147	-	1,667,373	1,275,859	391,514	10,679	15.6
1994	27	7,025	-	1,659,011	1,285,627	373,384	11,450	14.5
1995	27	6,606	-	1,614,800	1,254,133	360,667	11,687	13.8
1996	27	6,424	-	1,598,558	1,259,932	338,626	12,020	13.3
1997	41	5,733	-	1,484,194	1,194,414	289,780	12,192	12.2
1998	43	5,560	-	1,401,940	1,148,435	253,505	11,166	12.6
1999	45	5,637	-	1,480,666	1,173,239	307,427	12,455	11.9
2000	46	5,698	-	1,526,995	1,221,117	305,878	12,701	12.0
2001	45	6,150	-	1,568,723	1,263,314	305,409	13,103	12.0
2002	43	6,506	-	1,605,972	1,306,221	299,751	13,839	11.6
2003	45	6,257	-	1,549,949	1,223,330	326,619	14,144	11.0
2004	44	6,017	-	1,536,843	1,211,952	324,891	14,538	10.6
2005	45	5,971	-	1,506,172	1,182,535	323,637	14,692	10.3
2006	53	5,889	-	1,559,179	1,215,253	343,926	15,072	10.3
2007	53	5,099	-	1,687,782	1,317,467	370,315	15,651	10.8
2008	56	4,886	-	1,665,798	1,290,682	375,116	15,847	10.5
2009	55	4,689	-	1,640,334	1,285,965	354,369	16,196	10.1

주 : 1) 조직률 산정방식 : 조합원수÷조직대상근로자〔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 - 공무원(5급이상, 6급이하 중 사용자에 해당하는자, 교원중 교감이상 관리자 제외)〕×100
2) 2009년 조직대상근로자(16,196천명)=임금근로자(16,555천명)-공무원중 사용자해당자(359천명)
3) 연합단체는 전국규모 산별단위노조를 포함한 숫자임
4) 단위노조는 연합단체 및 설립신고된 산별노조 지부·분회를 포함한 숫자임
자료 : 노동부(2010)

2. 산업별, 직업별 노조 조직

한국 노동조합은 미조직노동자 및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기업노조를 넘어서는 초기업노조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였다. 초기업노조를 통해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노조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노동자들이 비교적 쉽게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직형태를 전환하는 노력을 한 것이다.

<표 4-9> 노조조직형태별 조직현황

(단위: 개소, 명, %)

총연맹별	조직형태	노조 수	조합원 수
한국노총	기업별노조	2,369(94.3)	442,673(59.8)
	지역업종노조	107(4.3)	80,101(10.8)
	산별노조	16(0.6)	217,561(29.4)
	산별연맹	20(0.8)	0
	총연맹	1	0
	소계	2,513	740,335
민주노총	기업별노조	467(84.4)	114,577(19.5)
	지역업종노조	43(7.8)	8,218(1.4)
	산별노조	33(6.0)	465,599(79.1)
	산별연맹	9(1.6)	0
	총연맹	1(0.2)	0
	소계	553	588,394
미가맹	기업별노조	1,518(93.5)	214,617(68.9)
	지역업종노조	78(4.8)	6,897(2.2)
	산별노조	13(0.8)	90,091(28.9)
	산별연맹	14(0.9)	0
	소계	1,623	311,605
전체	기업별노조	4,354(92.9)	771,867(47.1)
	지역업종노조	228(4.9)	95,216(5.8)
	산별노조	62(1.3)	773,251(47.1)
	산별연맹	43(0.9)	0
	총연맹	2	0
	전체	4,689	1,640,334

자료: 노동부

현재는 초기업노조인 지역업종노조, 산별노조, 산별연맹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노동조합 수에서 보면 기업별노조는 4,354개, 지역업종노조는 228개, 산별노조는 62개, 산별연맹은 43개로 그 비중은 각각 92.9%, 4.9%, 1.3%, 0.9%이다(<표 4-9> 참고). 노동조합 수에서 초기업노조는 작지만 포괄하고 있는 조합원 수에 있어서는 기업별노조가 47.1%이고, 초기업노조가 52.9%로 더 많은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기업별노조는 2,369개, 지역업종노조는 107개, 산별노조는 16개이며 조합원 수 비중은 기업별노조가 59.8%, 초기업노조가 40.2%이다. 기업별노조에 속한 조합원 수가 초기업노조에 속한 조합원 수보다 약 19.6% 많은 셈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기업별노조는 467개, 지역업종노조는 43개, 산별노조는 33개이며, 조합원 수 비중은 기업별노조가 19.5%, 초기업노조가 80.5%로 압도적으로 지역업종노조나 산별노조에 속한 조합원 수가 많다. 총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노조의 경우는 기업별노조는 1,518개, 지역업종노조는 78개, 산별노조는 13개이며 조합원 수 비중은 기업별노조가 68.9%, 초기업노조가 31.1%로 기업별노조에 속한 조합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초기업노조의 비중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미가맹노조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산별노조와 지역업종노조의 건설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추진되어 온 조직에서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총연맹별 산업별 조직현황은 <표 4-10>과 같다. 한국노총에서 조합원 수가 많은 산업별조직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 5만명이 넘는 조직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서는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조합원 수가 5만 명이 넘는 산업별조직이다. 미가맹노조에서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유일하게 조합원 수가 5만 명이 넘는 조직이고, 공무원과 관련된 노조조직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4-10> 총연맹별 산업별 조직현황

(단위 : 개소, 명)

총연맹별		조합수	조합원수		
			계	남성	여성
총 계		4,689	1,640,334	1,285,965	354,369
한국노총	계	2,513	740,335	602,785	137,55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440	100,240	78,057	22,18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1	96,142	52,217	43,925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376	84,239	82,820	1,419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277	80,646	79,800	846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407	65,449	50,275	15,174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371	56,423	44,239	12,184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85	45,814	37,940	7,874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53	26,110	25,955	155
	전국체신노동조합	1	25,132	19,472	5,660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51	23,891	22,984	907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27	13,723	11,475	2,248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79	12,509	7,626	4,883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79	11,988	7,467	4,521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32	8,676	7,720	956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39	8,995	6,666	2,329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13	8,044	7,509	535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7	6,207	1,146	5,061
	직가입노조	104	24,292	22,327	1,965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1	5,326	4,629	697
	전국철도산업노동조합	1	4,014	2,724	1,290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19	4,217	3,022	1,195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8	3,841	3,617	224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8	2,047	1,989	58
	전국출판노동조합연맹	27	1,803	1,358	445
	한국공무원연맹	4	3,883	3,393	490
	전국전력노동조합	3	16,684	16,358	326

총연맹별		노조수	계	남성	여성
민주노총	계	553	588,394	441,663	146,731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1	147,000	139,958	7,042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연맹	128	139,124	119,230	19,89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71,291	24,613	46,678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125	67,741	43,112	24,629
	보건의료노동조합	1	40,025	9,606	30,419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10	2,899	2,296	603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19	32,252	32,047	205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40	21,620	19,991	1,629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91	16,912	9,904	7,008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7	14,483	14,259	224
	직가입노조	115	21,511	18,392	3,119
	전국대학노동조합	1	7,531	4,531	3,000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1	2,080	1,560	520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4	1,365	0	1,365
	전국민주일반시설환경노동조합연맹	9	2,560	2,164	396
미가맹	계	1,623	311,605	241,517	70,088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1	54,394	33,477	20,917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14	26,697	25,331	1,366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15	23,457	21,991	1,466
	한국교원노동조합	1	7,928	4,614	3,314
	법원공무원노동조합	1	7,500	5,000	2,500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	9	6,423	4,370	2,053
	전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7	2,355	1,296	1,059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19	2,198	1,563	635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13	1,743	1,063	680
	도시철도노동조합연맹	1	1,200	400	800
	화학산업광주전남지역노조연합	10	1,793	1,788	5
	건설기업노련	5	1,724	1,681	43
	전국단위신노련	12	143	135	8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4	1,761	1,727	34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4	1,897	1,897	0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7	10,670	8,228	2,442
	순수미가맹	1,500	159,722	126,956	32,766

한편 산업별 노조조직 중에서 주요 산별노조를 알아본 것은 <표 4-11>과 같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직할로 산별노조가 설립된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산별연맹에 따라서 부문별로 여러 산별노조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련의 경우는 산하에 6개의 산별노조를 지니고 있다. 전국농업협동조합, 전국손해보험, 전국민주금융, 전국증권산업, 전국생명보험산업, 전국축산업협동조합이 그것이다.

총연맹별로 주요 산별노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노총은 전국금융산업, 전국체신, 전국전력, 전국담배인삼, 한국철도산업, 전국건설기계노조가 있고 민주노총은 전국금속, 전국교직원, 전국보건의료산업, 전국대학노조가 총연맹 직할로 되어 있다. 미가맹노조의 경우는 전국민주공무원이 가장 대표적인 산별노조임을 알 수 있다.

양 노총은 노총 직할이든지 각 산별연맹에 부문별 산별노조든지 조직내에서 기업별노조를 극복하고 산별노조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 왔다. <표 4-12>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산별연맹(노조)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60년대 한국노총에는 철도, 섬유, 광산, 전력, 외기, 체신(→우전통신→정보통신), 부두(→항만), 운수, 해원(→선원→해상산업), 금융, 전매(→담배인삼), 화학, 금속, 연합, 출판, 자동차 등 16개 산별노조(연맹)가 가맹해 있었다. 1970년에는 관광노련이 자동차노련에서 분리되어 17개로 늘어났고, 1980년에는 항만노조와 운수노조가 항운노련으로 통합하여 16개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1961년부터 1987년까지는 16개 산별노조(연맹)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김유선, 2008).

그러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인 1988년에는, 우전통신노련에서 체신노조, 금융노련에서 보험노련과 사무노련, 화학노련에서 고무노련, 자동차노련에서 택시노련이 분리되어, 산별노조(연맹)가 모두 21개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체신노조, 보험노련, 고무노련, 택시노련은 한국노총에 가맹했지만, 사무노련은 한국노총에 가맹하지 않은 유일한 산별노조(연맹)가 되었다.

1993년에는 민주노총 계열인 건설, 병원, 언론, 대학, 공익노련이 합법성을 획득했다. 1995년에는 한국노총에서 철도산업노련이 신설되고 보험노련이 탈퇴했으며, 사무노련은 보험노련과 함께 사무금융노련으로 통합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이 출범한 1995년에 한국노총 소속 산별노조(연맹)는 20개이고,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연맹)는 6개가 되었다.

1997년 3월 초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삭제되자, 1997년 한 해 동안 산별노조(연맹) 14개가 설립되었다. 한국노총에서는 공공서비스노련과 아파트노련 2개가 신설되고, 민주노총에서는 자동차산업연맹, 민주금속연맹, 현대금속노련, 민주화학연맹, 민주섬유연맹, 민주금융연맹, 화물운송연맹, 민택노련, 민철노련, 시설노련 10개가 신설되었으며, 양 노총에 가맹하지 않은 산별노조(연맹)로는 정투노련과 상업연맹이 신설되었다.

1998년에는 공공건설노련과 의료산업노련이 신설되고 정투노련이 가입함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산별노조(연맹)는 25개로 늘어났다. 민주노총에서는 자동차산업연맹, 민주금속연맹, 현대금속노련이 금속산업연맹으로 통합하고, 건설일용노련과 민주관광노련이 신설되고, 상업노련이 가입함에 따라 소속 산별노조(연맹)가 17개로 늘어났다.

1999년 한국노총에서는 예능인노련과 한교조가 신설되어 산별노조(연맹)가 27개로 늘어났다. 이에 비해 민주노총에서는 건설노련과 건설일용노련이 건설산업연맹으로 통합하고, 사무노련과 민주금융노련이 사무금융노련으로 통합했으며, 민철노련과 공익노련, 한국통신 등이 공공운수사업서비스연맹으로 통합하고, 여성노련이 신설되고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산별노조(연맹)는 16개로 줄어들었다.

2000년 한국노총에서는 화학노련에서 식품산업노련이 분리되어 산별노조(연맹)가 28개로 늘어났고, 민주노총에서는 민주화학연맹과 민주섬유연맹이 민주화섬연맹으로 통합하여 15개로 줄어들었다.

2001년 민주노총에서는 민주관광과 상업연맹이 민간서비스연맹으로 통합했고, 2002년 한국노총에서는 철도노조가 탈퇴한 뒤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사업서비스연맹에 가입했다. 2004년 한국노총에서는 공공건설노련과 정투노련이 공공서비스노련으로 통합했고, 예능인노련과 한교조가 제명되고 사립학교노련이 신설되었다. 민주노총에서는 공공운수사업서비스연맹에서 IT산업연맹이 분리 설립되었다.

<표 4-11> 주요 산별노조

총연합단체	연맹별	노동조합명	조합원수	설립일
한국노총	한국노총 직할	전국금융산업	96,142	1961. 9
		전국체신	25,132	1961. 8
		전국전력	16,145	1961. 8
		전국담배인삼	5,326	1960. 8
		한국철도산업	4,014	2004. 1
		전국건설기계	11,753	2007.12
	해상노련	전국선박관리선원	5,800	1981. 2
	택시노련	전국택시산업	44,400	2000. 4
민주노총	민주노총 직할	전국금속	147,000	2001. 2
		전국교직원	71,291	1999. 7
		전국보건의료산업	40,025	1998. 2
		전국대학	7,531	1998.11
	언론노련	전국언론	13,384	2000.11
	사무금융노련	전국농업협동조합	8,442	1999.10
		전국손해보험	8,977	1999. 5
		전국민주금융	5,092	2006. 8
		전국증권산업	5,000	1999. 3
		전국생명보험산업	3,568	1998. 4
		전국축산업협동조합	3,000	1999. 4
	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	51,000	2007. 1
		전국공공서비스	35,899	2006.11
		한국발전산업	6,026	2001. 7
		전국공공연구	5,000	2007. 3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	25,000	2007. 3
		전국플랜트건설	4,200	2007. 8
	민주화학섬유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	12,920	2004.10
미가맹		전국민주공무원	54,394	2007.10
		한국교원	9,875	1999. 7
		법원공무원노동조합	7,500	2007. 7
		전국여성	5,820	1999. 8
		전국기능직	4,560	2006. 2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	3,867	199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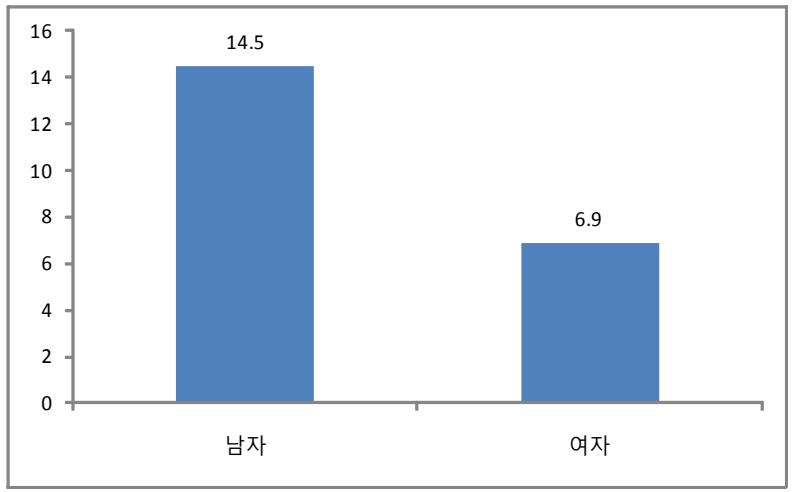
<표 4-12> 산별노조(연맹)의 연도별 추이

시기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1960년대	16	16	철도, 섬유, 광산, 전력, 외기, 체신(→우전통신→정보통신), 부두(→항만), 운수, 해원(→선원→해상산업), 금융, 전매(→담배인삼), 화학, 금속, 연합, 출판, 자동차	0		0	
1970년대	17	17	관광(70년)	0		0	
1980~87년	16	16	항만+운수→항운노조(80년)	0		0	
1988~92년	21	20	체신,보험,택시,고무(88년)	1	사무노련(88년)	0	
1993~94년	26	20		6	건설, 병원, 언론, 대학, 공익(93년)	0	
1995~96년	26	20	철도산업신설;보험탈퇴(95년)	6	보험+사무→사무금융(95년)	0	
1997년	40	22	공공서비스노련, 아파트노련	16	자동차산업, 민주금속, 현대금속, 민주화학, 민주섬유, 민주금융, 화물운송, 민택노련, 민철노련, 시설노련	2	정투노련, 상업연맹
1998년	42	25	공공건설, 의료산업 신설; 정투노련 가입	17	자동차+민주금속+현대금속→금속산업연맹 ; 건설일용, 민주관광 신설; 상업연맹 가입	0	정투노련, 상업연맹 양노총가입
1999년	43	27	예능인노련, 한교조	16	건설노련+건설일용노련→건설산업연맹; 사무노련+민주금융노련→사무금융노련; 민철노련+공익노련→공공운수사업서비스연맹; 여성노련, 전교조	0	
2000년	44	28	식품산업노련	15	민주화학+민주섬유→민주화섬연맹	1	
2001년	43	28		14	민주관광+상업연맹→민간서비스연맹	1	
2002년	41	27	철도노조 탈퇴, 민주노총소속 공공연맹 가입	14		0	
2003년	43	27		16	민주버스	0	
2004년	42	24	공공건설+정투+공공서비스→공공서비스노련; 사립학교노련 신설; 예능인노련, 한교조 제명	16	IT산업연맹	2	예능인노련, 한교조
2005년	43	24		16		3	지방공기업노련

자료: 김유선(2008)

한국 노동조합이 조직하고 있는 노동자를 인적 속성 및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 노조조직률을 보면 [그림 4-4]와 같다. 노조조직률은 남자는 14.5% 여자는 6.9%로 남자의 조직률이 여자의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비중은 연령이나 학력별로 살펴보아도 남성노동자에 비해 모든 차원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낮고 노동조합의 조직능력이 비교적 낮은 서비스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4] 성별 노조조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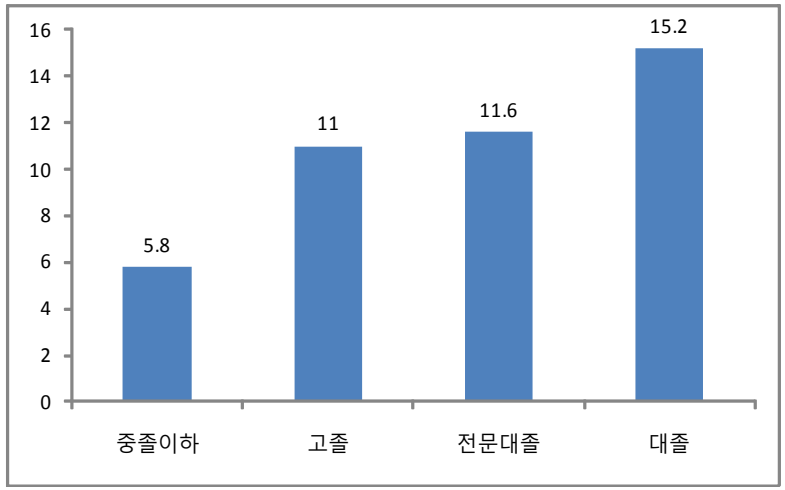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다음으로 학력별 노조조직률은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노조조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5] 참고). 학력별 노조조직률은 중졸이하는 5.8%, 고졸 11.0%, 전문대졸 11.6%, 대졸 15.2%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과 중졸이하의 노조조직률은 거의 10% 가까이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학력별로 조직률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이 대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졸이상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대졸이상의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 노동조합이 산별노

조 건설운동을 통해 초기업노조를 많이 결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기업별노조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림 4-5] 학력별 노조조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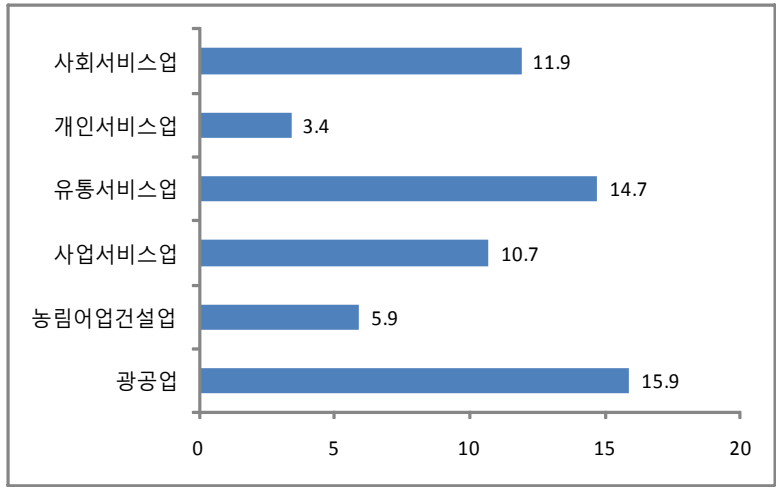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별 노조조직률을 보면 현재 노동조합의 주요한 조직기반을 알아볼 수 있다. 산업별로 노조조직률이 가장 높은 것은 광공업이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6] 참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자 구성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포괄하고 있는 산업은 전통적인 노동조합 조직기반인 광공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유통서비스업이 14.7%, 사회서비스업 11.9%, 사업서비스업 10.7%, 개인서비스업 3.4%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조직화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개인서비스업은 노동조합이 아직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농림어업건설업의 조직률도 5.9%에 머물고 있다. 이 부문에서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조로 조직하기 힘든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6] 산업별 노조조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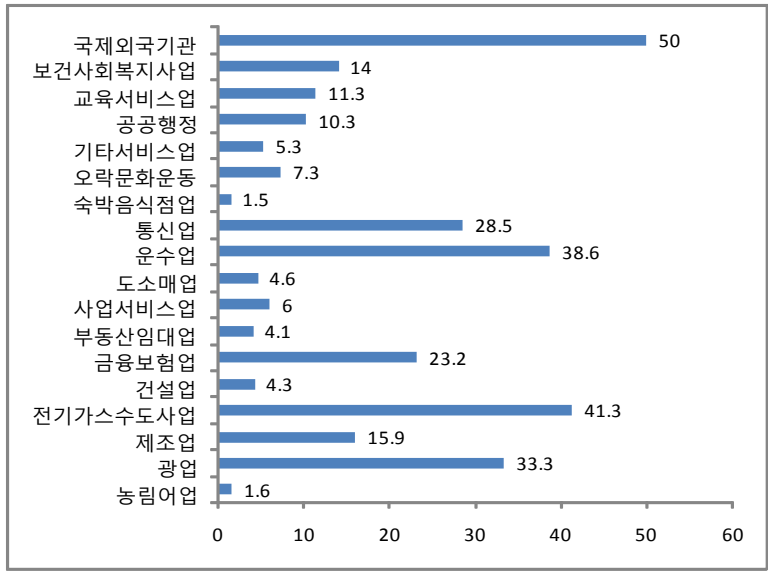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을 좀더 세분화하여 업종별 노조조직률을 살펴보면 [그림 4-7]과 같다. 노조조직률이 30%가 넘는 업종은 광업(33.3%), 전기가스수도사업(41.3%), 운수업(38.6%), 국제외국기관(50.0%)로 나타났고, 금융보험업과 통신업도 각각 23.2%, 28.5%로 비교적 높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도 산업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주요 조직기반이었던 광업과 운수업의 조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기반은 여전히 산업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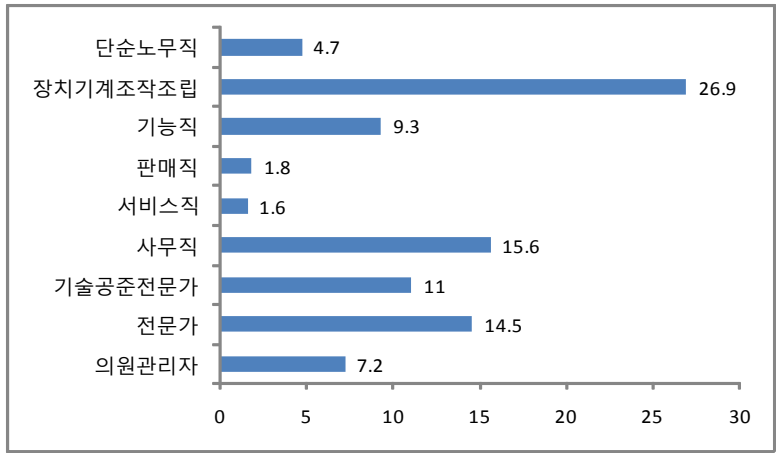
서비스산업의 조직률은 여러 업종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건설업(4.3%), 부동산임대업(4.1%), 사업서비스업(6.0%), 도소매업(4.6%), 숙박음식점업(1.5%), 오락문화운동(7.3%)으로 많은 업종이 노조조직률이 10%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서비스산업 중에서 공공행정(10.3%), 교육서비스업(11.3%), 보건사회복지사업(14.0%)은 10%를 조금 넘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국 노동조합 조직기반은 여전히 광공업 및 운수업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조직률은 저발전되어 있는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7] 업종별 노조조직률



자료: 통계청

[그림 4-8] 직업별 노조조직률



자료: 통계청

다음으로 직업별 노조조직률을 살펴보았다([그림 4-8] 참고). 직업별 노조조직률을 조직률이 큰 순서대로 보면, 장치기계조작조립(26.9%), 사무직(15.6%), 전문가(14.5%), 기술공준전문가(11.0%), 기능직(9.3%), 단순노무직(4.7%), 판매직(1.8%), 서비스직(1.6%)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이 5%도 안 되는 직업은 단순노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으로 이들 직업들은 고용관계 및 고용형태에서 계약직 및 특수고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노조 조직화가 어려운 직종으로 알려진 부문이다. 조직률이 낮은 직종들은 노동자 비중에서는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조 조직화가 필요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소결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상황은 1980년대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산업구조 상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업종들이 분화하며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기에 힘든 상황에 있다. 노동조합운동 차원에서도 미조직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한 '전략 조직화'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노동시장 구조에 걸맞는 노조 조직화가 되고 있지는 못하다.

현재 노동조합의 조직상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점차적이지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조조직률은 10.1%까지 내려왔고 조합원 수는 16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연도별 추이에서 조직률과 조합원 수는 1989년 19.8%, 193만 명에서 해마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노동조합 조직기반을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보면, 민간부문의 조직률은 낮은 수준에 있고 공공부문의 조직률은 높은 수준에 있다. 현재 민간노조의 조직률은 8.9%로 10%도 채 안 되는 상황인 데 비해 공무원노조는 56.8%이고 교원노조는 20.6%로 중간 수준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공부문 노조조직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미조직노동자들이 상당 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직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규모에 따른 노조조직률 양상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조직률이 7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50명 미만의 소기업의 조직률은 2.3%에 불과하다. 고용형태 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노동조합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0.2%에 그치고 있어, 노조조직률이 낮은 사업장이나 고용형태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조직화 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조합운동이 꾸준히 추진해온 산별노조 건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노총에서는 산별노조가 포괄하는 조합원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노조의 수가 많고 기업별노조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구조변화로 인한 미조직노동자를 더 포괄하기 위해서는 좀더 질적으로 발전된 산별노조 건설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있다.

다섯째, 노동조합의 현재 노조 조직상기반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초기에 이루어진 금속, 화학, 공공부문, 건설, 운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비스산업이

비대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직전략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에서 비교적 조직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에도 10%대의 조직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노조조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업별로도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 단순노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의 노조조직률은 5%도 채 못 되는 상황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이처럼 한국 노조의 조직기반은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서비스산업, 비정규직, 여성, 단순노무직, 판매직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산업 및 직종들이 업무 성격 및 고용관계 특성 상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조건에 있고,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조직화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조합운동이 미조직,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사업을 유기적으로 잘 추진해야 되겠지만 이와 함께 정부와 사용자도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와 같은 취약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노조 조직기반 변화는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 노동시장 변화 자체가 그 시대의 경제적 조건 및 고용정책, 노동법의 실행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조직기반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회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시기에 따라 어떤 산업 및 직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구성 비중에 따라 조직이 갖추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변화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에 볼 수 있었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 힘든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일정한 실업률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취업률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이 점은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용정책 및 노사간의 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별로 보면 노동시장 구성에서 제조업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업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점은 노동조합조직에서 제조업노조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서비스업노조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표현하는 것이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제대로 조직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셋째, 연령별로 보면 최근 들어 경제침체 국면이 되거나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청년층의 고용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없는 성장 아래 전반적인 취업률 증가의 둔화라는 문제가 있지만, 특히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한 사회의 경제생활을 기형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이 여전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금 및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사회적으로

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비정규직을 구성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나 시간제 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정책 상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 상황에서 노조 조직기반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노조의 기반 위에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업이나 공공부문을 조직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노조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조직기반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과제로 삼아야 할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그동안 노조에서도 많이 논의되어 왔던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의 중요한 조직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비중이 0.2%에 불과할 정도이고, 30명 미만 기업의 노조조직률도 0.2%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산별노조를 확대하거나 노조가 조직화 위원회를 두어 조직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필요가 있고 정부와 경영자의 인식도 협력적으로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다.

둘째, 고용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조가 적극적으로 해당 부문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노조 자체의 조직 개편에 대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조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 노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업 노동자를 조직화하려면 새로운 조직운영이나 조직문화가 요구된다. 또한 서비스노동자에 대해서는 제조업노동자와는 다른 노동문화를 만들어서 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노조 조직화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발전 측면에서도 청년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 및 계획을 가지고 노조에 가입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청년층이 노조에 친근감을 가지고 우호적인 문화를 지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노동조합은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조직운영 및 조직문화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노력과 함께 노동조합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시장 상황도 특정한 사안을 계기로 급격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청년노동자 및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김동헌(2010),「이행노동시장론」,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고용노동시장포럼 발표문

김유선(2008),『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2010a),「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이슈페이퍼』, 4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10b),「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이슈페이퍼』, 7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정한(2009),『2008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노동부(2010),『2009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노동부(2010),『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민주노총(2009),『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례집』

이병희 외(2008),『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고용변동』, 한국노동연구원

이재갑(2010),「2010년 고용정책 주요내용」,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고용노동시장포럼 발표문

정인수(2010),「노동시장 전망과 고용정책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고용노동시장포럼 발표문

한국노총(2010a),『미래고용전략 & 일자리대책』, 토론회 자료집

한국노총(2010b),『비정규직 토론회: 조직화·차별철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황수경 외(2010),『경제위기와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Dunlop, John(1958), *Industrial Relation Systems*, Henry Holt and Company New York

Eurofound(2009), *Industrial relations developments in Europe 2008*

Golden, Miriam and Pontusson, Jonas ed.(1992), *Bargaining for Change: Union Politic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Ithaca: Cornell Univ. Press

Gourevitch, Peter et al. ed.(1984), *Unions and Economic Crisis: Britain, West Germany and Sweden*, London: George Allen & Unwin

ILO(2009a), "Recovering from the Crisis: A Global Jobs Pact"

ILO(2009b),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Sectoral aspects"

Kochan, T., Katz, H. and MacKersie, R.(1986),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Industrial Relations*, Basic Book, Inc., New York

Kochan, T., Mckersie, R. And Cappelli, P.(1984), "Strategic Choice and Industrial Relations Theory", *Industrial Relations,* Winter, pp.16-39

Lange, Peter et al. ed.(1982), *Unions, Change and Crisis*, London: George Allen & Unwin

Turner, Lowell(1991), *Democracy at Work, Change and Crisis: Changing World Markets and the Future of Labour Unions*, Ithaca: Cornell Univ. Press

<부표 1> 노동조합 조직현황

(단위 : 명)

총연합단체	연맹별	노동조합명	조합원수	설립일
한국노총	한국노총 직할	전국금융산업	96,142	1961. 9
		전국체신	25,132	1961. 8
		전국전력	16,145	1961. 8
		전국담배인삼	5,326	1960. 8
		한국철도산업	4,014	2004. 1
		전국건설기계	11,753	2007.12
		노동부유관기관	2,881	2009.12
	해상노련	전국선박관리선원	5,800	1981. 2
		국적선해운노동조합	419	1988. 1
		전국원양산업	2,078	1985. 6
		전국선망선원	2,144	1991. 7
	연합노련	전국고속도로영업소	445	2000. 8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320	2005.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	125	1988. 7
	택시노련	전국택시산업	44,400	2000. 4
	화학노련	한국건설레미콘	437	2000.11
	계		217,561	
민주노총	민주노총 직할	전국금속	147,000	2001. 2
		전국교직원	71,291	1999. 7
		전국보건의료산업	40,025	1998. 2
		전국대학	7,531	1998.11
		한국비정규직교수	2,080	1994. 6
		전국민주선원	678	1998. 6
	언론노련	전국언론	13,384	2000.11
	사무금융노련	전국손해보험	8,977	1999. 5
		전국농업협동조합	8,442	1999.10
		전국민주금융	5,092	2006. 8
		전국증권산업	5,000	1999. 3
		전국생명보험산업	3,568	1998. 4
		전국축산업협동조합	3,000	1999. 4
		전국사무연대	505	1999. 4
		전국상호저축은행	403	1996. 6
		전국새마을금고	361	1999.11
		전국전세버스공제	110	2002. 6

총연합단체	연맹별	노동조합명	조합원수	설립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	51,000	2007. 1
		전국공공서비스	35,899	2006.11
		한국발전산업	6,026	2001. 7
		전국공공연구	5,000	2007. 3
		전국영화산업	2,512	2005.12
		전국시설관리	1,019	2000.11
		전국연예예술인	800	1997. 4
		전국자치단체상용직	246	2002. 5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	25,000	2007. 3
		전국플랜트건설	4,200	2007. 8
		전국기중기	100	1999. 8
	민주화학섬유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	12,920	2004.10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	2,339	2000. 1
	여성연맹	전국철도청소용역	613	2006. 4
	민간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	478	2000.11
	계		465,599	
미가맹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54,394	2007. 7
		한국교원노동조합	9,875	1999. 7
		법원공무원노동조합	7,500	2007. 7
		전국여성노동조합	5,820	1999. 8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4,560	2006. 2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3,867	1988. 1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2,042	2008. 5
		한국공무원노동조합	791	2006. 4
		대한민국교원조합	406	2008.12
		한국가수예능인노동조합	360	1999. 6
		무용노동조합	195	2000.11
		전국보조출연노동조합	147	2006. 9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134	2004.11
		계	90,091	

※ 주 : 이 자료에는 100명 미만의 11개 소규모노조(조합원수 369명)를 포함시키지 않았음(여기에는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 민주노총 소속 4개 노조, 미가입 4개 노조 등이 포함됨).

총연합단체	연맹별	노동조합명	조합원수	설립일
한국노총	연합노련	대한의료산업노동조합	42	2003. 6
		전국안전기사노동조합	12	2002. 6
	해상노련	해외취업수산노동조합	40	1988. 8
민주노총	직가입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80	2004. 1
		전국비정규직여성노동조합	70	2009.12
	민간서비스연맹	전국음식업노동조합	29	2003.12
	사무금융연맹	전국감정평가노동조합	4	2005. 6
미가입		한국예능인연주노동조합	70	2007. 8
		대한전공의노동조합	10	2006. 7
		크리스챤유니온 노동조합	9	2004. 5
		택배일용직노동조합	3	2007.10
합계(11개 노조)			369	

<부표 2> 지역별·전국중앙조직별 조직현황(단위 : 개소, 명)

구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전체				남성				여성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전체
서울	636	290	487	1,413	341,048	526,977	154,186	1,022,211	257,176	388,079	108,100	753,355	83,872	138,898	46,086	268,856
부산	176	15	97	288	49,399	3,231	9,978	62,608	46,198	2,572	8,850	57,620	3,201	659	1,128	4,988
대구	104	21	48	173	22,309	4,910	8,867	36,086	20,836	3,944	7,978	32,758	1,473	966	889	3,328
인천	176	18	72	266	24,897	1,951	6,822	33,670	22,282	1,911	5,497	29,690	2,615	40	1,325	3,980
광주	30	12	89	131	10,899	1,634	7,711	20,244	9,126	1,413	6,954	17,493	1,773	221	757	2,751
대전	63	22	25	110	21,543	9,486	12,682	43,711	19,135	8,710	11,573	39,418	2,408	776	1,109	4,293
울산	62	11	46	119	12,917	1,980	23,238	38,135	12,661	1,869	21,922	36,452	256	111	1,316	1,683
경기	469	46	297	812	117,805	7,384	44,314	169,503	91,859	6,054	36,065	133,978	25,946	1,330	8,249	35,525
강원	73	14	37	124	9,061	3,095	2,739	14,895	8,096	1,983	2,418	12,497	965	1,112	321	2,398
충북	120	15	57	192	18,758	3,081	5,078	26,917	13,207	2,877	4,211	20,295	5,551	204	867	6,622
충남	124	18	85	227	30,068	1,672	2,738	34,478	27,710	1,502	2,306	31,518	2,358	170	432	2,960
전북	86	12	54	152	11,778	1,328	9,002	22,108	11,074	1,237	6,045	18,356	704	91	2,957	3,752
전남	81	11	53	145	7,567	6,407	6,635	20,609	6,974	6,314	5,217	18,505	593	93	1,418	2,104
경북	141	21	75	237	27,817	4,243	2,807	34,867	25,269	3,417	2,557	31,243	2,548	826	250	3,624
경남	158	20	91	269	32,269	10,065	13,163	55,497	29,138	8,924	10,475	48,537	3,131	1,141	2,688	6,960
제주	14	7	10	31	2,200	950	1,645	4,795	2,044	857	1,349	4,250	156	93	296	545
전체	2,513	553	1,623	4,689	740,335	588,394	311,605	1,640,334	602,785	441,663	241,517	1,285,965	137,550	146,731	70,088	354,369

8. 지청별 조직현황

지방관서별	조합수				조합원수											
					전체				남성				여성			
구 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전체
전 체	2,513	553	1,623	4,689	740,335	588,394	311,605	1,640,334	602,785	441,663	241,517	1,285,965	137,550	146,731	70,088	354,369
서울지방노동청	79	79	100	258	142,440	52,487	34,119	229,046	87,400	37,449	30,341	155,190	55,040	15,038	3,778	73,856
서울강남지청	127	76	126	329	37,545	17,624	16,524	71,693	34,537	13,706	12,189	60,432	3,008	3,918	4,335	11,261
서울동부지청	70	19	51	140	17,309	18,883	58,782	94,974	15,657	18,075	36,505	70,237	1,652	808	22,277	24,737
서울서부지청	75	32	41	148	25,227	24,815	10,985	61,027	15,742	17,068	3,253	36,063	9,485	7,747	7,732	24,964
서울남부지청	121	65	80	266	90,969	409,232	22,854	523,055	78,998	298,924	16,585	394,507	11,971	110,308	6,269	128,548
서울북부지청	89	5	34	128	16,332	1,279	2,738	20,349	15,441	1,037	2,075	18,553	891	242	663	1,796
서울관악지청	75	14	55	144	11,226	2,657	8,184	22,067	9,401	1,820	7,152	18,373	1,825	837	1,032	3,694
춘천지청	19	6	19	44	1,739	237	2,062	4,038	1,696	195	1,908	3,799	43	42	154	239
강릉지청	32	3	9	44	4,227	149	181	4,557	3,864	149	176	4,189	363	-	5	368
원주지청	10	2	1	13	1,302	76	75	1,453	830	47	73	950	472	29	2	503
태백지청	6	-	4	10	1,518	-	257	1,775	1,482	-	251	1,733	36	-	6	42
영월출장소	5	3	-	8	293	2,633	-	2,926	237	1,592	-	1,829	56	1,041	-	1,097
부산지방노동청	108	12	61	181	40,759	3,017	7,702	51,478	39,149	2,443	6,721	48,313	1,610	574	981	3,165
부산동부지청	36	2	20	58	5,674	195	1,823	7,692	4,328	110	1,731	6,169	1,346	85	92	1,523
부산북부지청	32	1	16	49	2,966	19	453	3,438	2,721	19	398	3,138	245	-	55	300
창원지청	86	10	58	154	19,951	1,993	9,746	31,690	18,527	1,039	8,264	27,830	1,424	954	1,482	3,860
울산지청	62	11	46	119	12,917	1,980	23,238	38,135	12,661	1,869	21,922	36,452	256	111	1,316	1,683
양산지청	48	4	19	71	7,913	368	1,448	9,729	6,722	259	939	7,920	1,191	109	509	1,809
진주지청	20	5	8	33	4,102	204	1,487	5,793	3,655	166	1,003	4,824	447	38	484	969
통영지청	4	1	6	11	303	7,500	482	8,285	234	7,460	269	7,963	69	40	213	322
대구지방노동청	69	13	35	117	13,593	3,749	4,438	21,780	12,224	2,641	3,853	18,718	1,369	1,108	585	3,062
대구북부지청	66	10	26	102	13,464	3,310	4,730	21,504	12,426	2,929	4,375	19,730	1,038	381	355	1,774
포항지청	69	19	37	125	12,435	2,094	1,243	15,772	12,062	1,791	1,140	14,993	373	303	103	779
구미지청	32	-	20	52	9,777	-	1,129	10,906	8,537	-	1,074	9,611	1,240	-	55	1,295
영주지청	3	-	2	5	577	-	9	586	577	-	9	586	-	-	-	-
안동지청	6	-	3	9	280	-	125	405	279	-	84	363	1	-	41	42

지방관서별	조합수				조합원수											
					전체				남성				여성			
구 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전체
경인지방노동청	120	13	38	171	15,023	1,430	5,173	21,626	13,846	1,430	4,074	19,350	1,177	-	1,099	2,276
인천북부지청	56	5	34	95	9,874	521	1,649	12,044	8,436	481	1,423	10,340	1,438	40	226	1,704
수원지청	102	14	58	174	13,807	3,059	4,410	21,276	11,685	2,679	3,388	17,752	2,122	380	1,022	3,524
평택지청	60	6	34	100	5,753	262	4,985	11,000	4,509	223	4,826	9,558	1,244	39	159	1,442
부천지청	45	3	20	68	4,635	486	1,059	6,180	4,003	310	705	5,018	632	176	354	1,162
안양지청	60	9	36	105	15,515	1,003	1,256	17,774	12,182	591	1,081	13,854	3,333	412	175	3,920
안산지청	31	3	42	76	4,282	1,239	1,591	7,112	3,446	1,108	1,385	5,939	836	131	206	1,173
의정부지청	66	5	42	113	9,089	254	1,080	10,423	8,701	190	716	9,607	388	64	364	816
고양지청	12	-	19	31	18,565	-	871	19,436	11,503	-	392	11,895	7,062	-	479	7,541
성남지청	94	6	50	150	46,141	1,081	29,226	76,448	35,817	953	23,582	60,352	10,324	128	5,644	16,096
광주지방노동청	53	21	107	181	13,538	2,593	10,800	26,931	11,464	2,276	9,149	22,889	2,074	317	1,651	4,042
전주지청	41	8	27	76	7,523	881	4,993	13,397	6,957	826	3,218	11,001	566	55	1,775	2,396
익산지청	27	1	18	46	1,285	31	1,776	3,092	1,185	3	1,113	2,301	100	28	663	791
군산지청	18	3	9	30	2,970	416	2,233	5,619	2,932	408	1,714	5,054	38	8	519	565
목포지청	17	2	9	28	1,840	125	844	2,809	1,567	123	445	2,135	273	2	399	674
여수지청	55	7	36	98	5,288	6,273	4,347	15,908	5,113	6,185	3,926	15,224	175	88	421	684
대전지방노동청	87	23	34	144	23,358	9,546	12,795	45,699	20,509	8,766	11,650	40,925	2,849	780	1,145	4,774
청주지청	67	12	45	124	14,818	2,923	4,113	21,854	9,893	2,747	3,540	16,180	4,925	176	573	5,674
천안지청	76	8	55	139	22,847	448	1,877	25,172	21,059	296	1,524	22,879	1,788	152	353	2,293
충주지청	53	3	12	68	3,940	158	965	5,063	3,314	130	671	4,115	626	28	294	948
보령지청	24	9	21	54	5,406	1,164	748	7,318	5,277	1,150	705	7,132	129	14	43	186

<부표 3> 적용법규별 노조조직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조합수	조합원수		
		합계	남성	여성
노조법	4,588	1,399,028	1,133,624	265,404
공무원노조법	95	158,910	121,066	37,844
교원노조법	6	82,396	31,275	51,121
총 계	4,689	1,640,334	1,285,965	354,369

*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현업공무원은 25,275명임. 체신노조(25,132명)와 국립의료원 노조(143명)임.

<저자 약력>

인수범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스웨덴노동생활연구소 객원연구원
-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